3rd Pan-Yellow Sea Forum
환황해 포럼
Chungcheongnam-do

제3회 환황해 포럼 결과보고서

2017년 11월 2일(목) ~11월 3일(금)
공주 고마아트센터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2017년 11월 2일(목) ~ 11월 3일(금)

공주 고마아트센터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원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환황해포럼은 황해를 경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아시아 평화 공동체'구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으로서,
경제·환경·역사·청년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2017년 11월 2일(목) ~ 11월 3일(금)
공주 고마아트센터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일차 11월 2일 (목)	09:00-09:30	등록	
	09:30-10:10	개회식	개회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축 사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기조연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10:10-11:40	특별세션 1	한-중 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사 회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기조발제 : 안희정 (충남도지사) 토 론 :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정승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 대사) 장후이지 (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11:40-13:00	공식 오찬	
	13:00-14:30	본세션	평화1]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사 회 :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발 표 :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센터장)
			평화2]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사 회 : 김은숙 (한국교원대 교수) 발 표 :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부학장 및 이사) 판은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원)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14:30-14:50	휴식	
	14:50-16:20	본세션	번영1]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사 회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 표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자오유푸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미츠이 이츠토모 (가에츠대학 대학원 대학원장 및 교수)
			번영2]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사 회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발 표 :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송시궈 (중국 위해항무그룹 부사장)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토 론 :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6:20-16:40	휴식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6:40-18:10	본세션	공생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사 회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발 표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장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 토 론 :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공생2]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사 회 :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발 표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왕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조교수)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토 론 :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
	18:10-18:30	휴식	
	18:30-20:30	공식 만찬	
2일차 **11월 3일** **(금)**	09:30-10:50	특별세션 2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사 회 : 강명구 (서울대 교수) 발 표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 NPO 법인 DxP 이사장) 토 론 : 김종구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임재일 (국립공주대 미술교육과 객원교수) 조미수 (풀울림 공동대표, 전 Peace Boat 공동대표)
	10:50-11:10	휴식	
	11:10-12:30	특별세션 3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토 론 :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정일지 (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교수)
	12:30	폐회 오찬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7. 11. 2. ~ 11. 3. / 공주 고마아트센터
- 주최/주관/후원 : (주최) 충청남도 (주관) 동아시아재단, 충남연구원
  (후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 :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
- 참석인원 : 국내·외 참석자 총 2,150여명(개회식 350여명) 참여
- 역할참여자 : 48명(좌장 9, 발표 24, 토론 15/ 韓 26, 中 13, 日 7, 美 2)

  *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추궈홍(주한 중국대사),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신정승(전 주중한국대사), 김성환(전 외교통상부장관), 김종대(국회의원) 등 참석

포럼 주요 내용

- 개최목적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담론을 이끌고, 도내 주요영역(공공+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마련
- 비전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 목표 및 주제 :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
- 전략 : 환황해 지역의 번영(繁榮), 공생(共生), 평화(平和) 구축방안 모색

포럼 주요 성과

- 환황해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환황해 지역협력의 밑그림 제시
- 환황해권 국가들의 지방 정부 주요 연구기관들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마련하여 역내 지속적인 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 제시
- 충남도가 생각하는 환황해 평화공동체의 개념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환황해 평화공동체 현실화 방안을 공공 및 민간 분야에 걸쳐 홍보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Contents

개회식 ····· 8

특별세션1

한-중 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 20

본세션 평화1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 30

본세션 평화2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 40

본세션 번영1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 52

본세션 번영2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 64

▶ 본세션 공생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 78

▶ 본세션 공생2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 88

▶ 특별세션2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 104

▶ 특별세션3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112

제3회 환황해포럼 이모저모 ····· 126

개회식

2017년 11월 2일(목)

09:30~10:10

개회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축사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축사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기조연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환황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환황해 지역협력' 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역내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함.

| 개회사 |



안희정

국내외 귀빈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황해포럼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과 교류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논의해 왔습니다. 환황해권에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류의 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넓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외교,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직 이 지역에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19세기 말 민족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을 따라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식민 지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상흔은 지금까지 남아서 상호 갈등과 불신을 만들어내며 영토, 영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은 분단된 채 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일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대립 양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동북아시아가 아직 20세기의 냉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분담에 대해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곳곳에서 양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전 세계에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에도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6.25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집결시켰고 미국과 북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극단적 위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다섯번째, 민족국가의 국경을 뛰어넘는 도전 과제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과 사이버공간은 이미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위기요인들도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확산, 자연재해, 환경오염, 전염병, 테러 등의 문제에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민족국가의 낡은 틀과 냉전의 유산에 얽매여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력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기조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와 강한 안보, 그리고 책임 국방의 구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일-중-러 등의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며 그와 동시에 공존, 공영을 통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튼튼한 안보를 갖춰야 경제도 번영하고 남북관계도 주도하면서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환황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환황해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민족국가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겪었던 상호 불신과 갈등, 대립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에 마주한 초국적 문제들은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방정부간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단위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간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이러한 목표들은 국가 간의 외교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환황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상호 번영을 위해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꾸준히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새로운 실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낡은 20세기의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또한 협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환황해 지역협력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범위와 분야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환황해 지역협력에서 시작해서 환발해, 환동중국해, 환동해, 환북극해 등으로 다칭(多秤)의 협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불신과 갈등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을 세계화, 정보화, 지역협력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다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제안과 희망은 과거 선각자들의 고뇌와 혜안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에 맞서 싸운 안중근 의사는 여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집필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한중일 삼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평하며 경제, 외교, 안보까지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구성하는 동양평화회의, 삼국 공동의 은행과 공동 화폐, 그리고 삼국 연합군까지 제안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의 EU보다 한 세기 앞섰던 탁월한 식견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EU처럼 높은 수준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힘을 모읍시다. 첫째, 민족국가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에는 기성 민족국가의 폐쇄성과 국가이기주의라는 한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21세기에는 다른 국가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책무를 지는 새로운 규범과 인식 정립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과 테러, 자연재해 등의 초국적 문제는 국경이 없는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세기의 민족국가라는 낡은 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 단체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시다. 21세기는 개인과 지방정부도 국가 못지 않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도, 중국의 성, 일본의 현은 군소 규모의 국가 역량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들의 권익과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간의 소통, 교류, 협력을 통한 '이익과 희망 공동체'의 형성은 지역간의 번영은 물론 국가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을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만듭시다. 21세기의 국제체제 내에서 북한은 중세를 떠올리게 하는 제왕적 체제를 유지하며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지역 내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로 초대합시다. 국가간 협력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지방 협력체의 일원으로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중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삼농(三農)포럼에 언젠가 북한의 지방 정부도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시민 여러분,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저는 이것이 환황해 포럼에 모인 동북아시아의 시민들과 세계의 지성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환황해 지역협력'이 우리 동북아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하나 하나의 촛불이 촛불혁명을 이루었듯 우리들의 하나 하나의 노력이 결국은 이 지역과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 사



윤석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의 윤석우 의장입니다. 마침 이곳이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1400년 전 백제의 문화를 꽃피웠던 웅진단에서 오늘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이라는 주제로 「제3회 환황해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세 번째로 뜻깊은 본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님, 김성환 전 장관님, 해외 교류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오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면서 국가 간 군사·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간다면, 동반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



추궈홍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천고마비의 계절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한국의 역사 문화 도시 공주에서 개최되는 제3회 환황해포럼에 초대받아 오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중국대사관을 대표하여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 드리며, 행사를 주최하시는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은 환황해 지역 발전 및 대외교류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황해경제권'을 동북아 국가 지역 협력의 주요 무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환황해 지역 협력을 이어오고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은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점점 더 긴밀한 분업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호협력의 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발해지구'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징진지, 리아오닝, 산동 등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비교적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공포한 '환발해지구 협력 발전 요강'에 따르면 주요 인프라 시설 확대, 생태 보존 지역 강화, 산업 연계 합작 등의 새로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황해지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중 양국은 황해 연안에 자리잡은 이웃 국가로 오랜 시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황해는 역사적으로 한중 공통의 해상 관문이자 양국 교역의 중요한 해운 통로였으며, 교통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은 한중 무역 및 교류 협력의 해상 교량 및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미 해양환경보호, 과학연구 및 어업 부분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한중 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상호간의 두터운 정치적 신뢰와 사회 각계 각층의 공통 노력이 기본이 되어 끊임없이 격려하고 전진해서 얻은 결과로 양국이 모두 자랑스러워 할만합니다. 물론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 중, 때로는 이런 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은 한중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한중 관계를 고도 중시하는 기조 속에, 양국 공통 합의에 입각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호혜협력을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양국이 활발한 교류 왕래를 이어가고, 지역 또는 국제 문제에 있어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이어나가 한중 양국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중 양국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고한 정치적 신뢰 속에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우호 기반을 다짐에 있어서 한마음을 다하고 노력하면 한중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얼마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중국에 매우 중요한 회의로 중국 미래 발전의 장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국공산당과 국가미래발전의 전체적인 방침과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회의로, 이는 8900만 당원의 의견이 반영된 공통된 인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심이 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전국의 인민들을 단합하고 이끌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책임이자 의무로 저희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대로, 중국은 화평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건설해서 누리는 글로벌 통치관에 따라 그 문을 활짝 열고 발전시켜 각국의 이익 교착점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중 양국은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환황해 등의 무대를 활용하여 지역 협력의 좋은 기회로 삼고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럼 주최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조연설 |



문정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윤석우 의장님, 추궈훙 대사님 자리를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사실 환황해포럼은 제가 재작년부터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왔습니다. 첫 해 보다는 두 번째가 더 나았고, 두 번째 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 그것이 환황해에서 시작한다는 뜻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그 동안 같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재래식 위협이 아니고 핵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6차 핵실험의 파괴력은 적게는 100키로 톤 많게는 150키로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15키로였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 25키로 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명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핵 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공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정부 자체가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행이 지난 40일동안은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겠지만 또 다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것은 과거와 같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제와 압박을 강조하고 그것을 넘어서 강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강압 전략이라는 것은 군사력의 위협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압박 전략이 잘못되면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강경정책, 또 거기에 굴하지 않은 김정은의 강경대응, 이러한 것들이 큰 군사적 충돌로 나올까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한- 중 간의 합의를 봄으로써 그동안 어려웠던 점이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처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의 교환을 통해서 이번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번 타결로 끝난 건 아니지만 곧 우리나라 대통령의 APEC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뵙고 또 East Asia Summit에서 리커창 총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12월 이내로 방중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면 더 진정된 정상 관계 그리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다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중 관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추궈홍 대사이십니다.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왕웨이 정무과장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왕웨이 정무과장도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만은 미국은 이제껏 패권국가였지만 중국은 부상하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는 “미-중이 군사적 충돌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협력관계가 있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주변 국가인 한국은 걱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을 엄중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 환경입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가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좌우를 넘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근원은 북한의 핵 야망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약 핵 무기라는 목표, 병진 목표만 펴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북한의 핵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탄두 미사일 능력도 향상되고 있는데 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모든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조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정한 원칙은 첫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영구적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쟁은 피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4가지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그래서 북미대화도 하고 남북대화도 하고 6자회담도 빨리 재개해서 대화의 틀 속에서 북한의 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과 일본의 편에 붙었다, 적대적이다, 대화를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9일 이후에 소위 NGO들 간의 접촉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니 대통령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제제와 압박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에 100퍼센트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하는 단독제제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이 북한을 고립봉쇄해서 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화협상으로 나와 말로 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협력을 안하니 제제와 압박이라는 차선책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모든 주권국가가 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력을 확고히 하고 북한이 미사일 공격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력을 갖고 군사적 억제력을 재래식과 핵 억제력 둘 다 갖자는 것입니다. 재래식 억제력은 한미 연합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자주 국방태세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고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우산을 확실히 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반응은 사드 문제로 논란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Patriot 3 미사일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사드도 할 수 없이 미국이 배치하는 것을 용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킬체인이라는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타격을 할 의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능력, 만약 북한이 쏘았을 때는 보복 반격으로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우리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도 합니다. '아니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한국외교의 창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일차적으로 풀어야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원활해져 우리가 북측과 많은 얘기를 가슴을 열고 할 수 있게 되면 북미관계,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도 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 No, 첫 번째 한국은 핵무기 보유하지 않겠다, 두 번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NPT 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항,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핵 연료공급그룹 규제조치 등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순간 한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되고 맙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고 있고 북한은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권능을 갖는 것인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무력화 시키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얘기하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무기 해체라는 주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재배치 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을 겨눈다고 생각하지 북한을 겨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억제의 1차적 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핵 보유 하지 않겠다고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어적으로, 억제력 차원으로는 할 필요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국가가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 군사적행동을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세 번째 No는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공존을 만들고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월 28일 미국 CSIS, 7월6일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흡수통일 하지 않을 테니 대화하고 나가자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인데 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비교적 장시간 동안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어려웠다가 최근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중 관계가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 이상의 단계로 가게 된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평화와 외교 등 밝은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제와 압박, 강압에 관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북한에게 얼마든지 대화의 여지가 있고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11월을 계기로 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이 북한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은 계속 자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남쪽과 대화를 하고, 2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3월 패럴림픽에도 참여를 한다면 금년 12월부터는 황금 기회가 올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세션 1

2017년 11월 2일(목)

10:10~11:40

“한-중 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역내 안보 및 경제 현안을 두고 상호 협력이 불가피한 한-중 관계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이어가면서 지난 25년간 이어온 교류의 사슬이 녹슬고 있다. 지금까지 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대립과 마찰을 슬기롭게 관리하면서 교류를 이어왔다. 한-중 두 나라가 다시 한 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황해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사회자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기조발제 | 안희정 (충남도지사)

토론자 |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정승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 대사)
장후이지 (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한중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
- 지방 정부 간 협력 과제를 추후에 확대하여 지역 현안을 중심에 놓고 지방정부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함.
- 양국 지도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함.
-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환황해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해야 함.


김흥규


안희정


김성환


신정승


장후이지

김흥규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서 기조발제 하신 후 어떻게 한중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충남도는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유관순 누님까지 애국열사의 땅이다. 역사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중요한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황해 지역에서 오래된 아시아 교역의 중심이며, 1400년전 백제는 아시아 해상 교류 왕국이었다. 공주, 부여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유도 백제 유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황해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지방 지역의 현안으로 가장 지방적인 주제가 가장 세계적인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세계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다.

1992년 수교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다. 교역 규모가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6년 무려 33배가 늘어난 2114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갖게

되었다. 상호 인적교류는 연간 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양국 간 항공 편수도 주 1100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현재 사드 문제 및 북핵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그동안 구현되었던 것처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명실상부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양국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 간 협력 과제를 추후에 확대해야 한다. 양국 정부들과 지방 정부는 국가간 많은 외교적 갈등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현안을 중심에 놓고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국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자체의 발생분으로만 보면, 미세먼지는 조사에 따라 50-60% 내외가 되고, 나머지 40-50% 이상은 대부분 역외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극복함에 있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의 에너지 전환은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구체적 실천 과정에 연동되어야 하고, 소비 체계가 지방 정부에 구체적 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실천되기 힘들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천이 주민에 의해서 당부 되지 않으면 협약과 약속들이 이행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다행히 중국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약속했고, 또 기후변화 협약은 반드시 대기 미세먼지 문제와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2012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함께 2012년 도쿄 SDGs역시 합의되었다. 이 협의의 17개 대분류의 모든 구체적 목표(goal)는 결국 지방정부의 실천과제이다. 어떻게 생태를 보존할 것이며,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지 등의 주제들을 지방정부가 실천하지 않으면 국제기구에서 언급 되더라도 실천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는 국가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과 국가의 주권자들이 자기 생활의 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21세기의 외교비전이다.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가장 중요한 주권자들의 요구이자, 시민들의 요구를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의 경제 활동과 생활 속의 재산권 및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정부는 존재해야 한다. 전 세계적 주제를 지방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지방 정부의 협력 제의 구상이야 말로 현재 한중일 및 동북아시아의 거대 담론 충돌을 풀어내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력과 시도들이 확대되어서 한중 관계와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동북아 평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김흥규 지금 직면한 국제정치적 어려움이 미중간 자율경제, 동북아 분업구조가 해체 되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기초가 약해지고 북핵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것이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분업구조를 마주하게 되면서 이익 공동체를 만들고, 실질적인 협력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안 지사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중추적 중견 국가로써 어떻게 생존, 번영, 안정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민족국가 체제의 갈등과 대립에 갇힌 동북아에 새로운 실험적 제안을 던지고 있다. 이를 지역정부간 환황해 지역 협력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접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성환 환황해포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번째는 외교만이 외교하는 시대는 지났기에 지방간 협력을 통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한중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또한, 5명의 당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지방 당 및 지방 성장 출신이며,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에서 성장 및 서기를 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정상회담도 하였으며 한국 기업에 대해서 잘 안다. 특히 왕양 부총리는 광둥성 서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한국에 왔고, 한국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기에 앞으로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도지사님이 발제문 자료를 통해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다. 양국 지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경제 협력 추진, 그리고 '환황해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접목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한중 관계는 유래가 없는 발전을 해왔다. 한중 관계가 외형적으로 발전했지만, 양국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신뢰 부분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신 안 지사님 말씀에 동의한다. 지난 일 년여 동안 사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양국 지도자 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없었다. 이것이 사드 사태를 두고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사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우리의 가장 큰 3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와 염려를 표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지도자 간 신뢰의 정점은 정상간 신뢰와 정상을 통한 외교이다. 정상간의 빈번한 만남이 중요하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 7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만났으나, 아직 양자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호 방문은 그 나라 상황을 직접 보고, 장시간 생활을 같이 하며 신뢰와 우정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일주일 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년 1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곳이 북경이기에 시 주석이 차기 올림픽 개최국으로 동계올림픽에 참석해주시길 기대한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의 중 신뢰를 확보하면 한중 관계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상간에 신뢰, 또는 케미스트리(chemistry)라는 말을 쓰는데, 정상간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미국과 우리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아서 한미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시 주석 혹은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 분의 정상회담 신뢰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두번째는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한 한중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황해 지역과 두 곳에서 지역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텐진-허베이성 세 개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징진지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장강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모두 황해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황해 협력을 통해서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장강 삼각주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되어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타겟층을 찾고 있다. 이 지역과의 협력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현재 환황해 지역이 면한 지역에 약 26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원자력 발전에서 안전이 중요하고 특히 중국과 한국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환황해지역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에너지, 특히 가스 수입국이다. 중국과 환황해 협력을 통해 바잉파워(buying power)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해 오는데 그동안 주로 동해에 북한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의 만주를 통해 서해 바닥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면 비용이나 도입의 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쪽 동해를 통해 들여올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쉽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 환황해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황해 바다 밑을 통해 들여오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사업이다.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서 일대일로 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면 한중 협력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이 국내는 서부 쪽, 대외적으로는 미얀마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장기적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해와 면해 있는 중요한 항구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해상 통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황해 지역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 접목의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

신정승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한반도의 평화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에 대해 공통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응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냉랭하였지만, 금번에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협력의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대화가 오간 것은 한중 수교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인접국으로서, 서로간의 우호적 관계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평화적 통일 그리고 상호간의 경제적 성장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과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우선, 양국간에 정치적 신뢰, 지도자간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시 말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필요하다. 다만, 미중간 전략적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북핵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와 같은 중국과의 갈등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정국과 관계없이 더욱 안정적인 양국간 신뢰구축을 위해 한국이 자신의 국익,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는 대중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한중간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소통을 통해 우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서는 우리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양국 경제에 상호 보완성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계속 필요하도록 산업기술과 또 산업 혁명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환황해 지역 협력은 물론, 일대일로 특히 환황해 지역과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실크로드 협력을 감안하여 작년에 부산-상해 협력을 발전하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 지자체 청년 인간 교류를 위해 양국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사드 갈등으로 인해, 양국민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감정을 순화시키고, 교류와 협력으로 다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협력, 민간 협력과 교류가 유용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감정과 교류가 중요하다.

장후이지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가 협의서를 발표하면서 개선이 되었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중 양국 관계 교류와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한중 무역 경제협력 규모가 2000억 달러 이상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 3000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인문 교류에 있어서, 매년 한중 양국간에 1000만명 이상이 교류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모범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중관계 안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 앞으로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중미 양국의 G2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한미 동맹,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에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학자의 관점에서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의 원인으로 동북아 지역은 긴장 상태라 평가한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의 갈등은 교류와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상호간 소통을 통해 이해를 돈독하게 조성한다면,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를 넘어서 정상적인 궤도로 발전할 수 있다. 합의를 볼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실천한다면, 중국은 아시아의 안보 평화를 강조하며, 아시아 경제, 아시아 국가, 한중 양국 관계, 동북아 지역 문제, 지역 안보와 평화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드 문제의 경우, 한중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이를 악화시켰다. 한중 양국 관계는 심도있게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정상회담 교류뿐만 아니라, 각층 교류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경제협력은 한중 양국간에 중요한 분야이다. 중국의 신 북방 정책은 이와 연계성이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지방 정부 간 교류를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한중 양국의 교류의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국가 안보에 대한 갈등이자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언론의 확대 재생산된 보도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한중 양국간 언론 교류가 중요하다. 또한, 상호협력을 통해 분쟁을 좁히는데 노력해야 하고, 정치 및 안보 이견은 안보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앞으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실적 해결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Q&A |

안희정 구체적으로 경제적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지도자 간 상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안해 주실 말이 있는지?

신정승 사드 관련해서 생각을 드리자면, 누가 옳은지 따지는 것 보다는 현재 갈등이 봉합되는 수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드 문제가 발생하려는 시점부터 봉합되는 과정까지 한중간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토론이 진행되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없었다. 특히 중국 측이 사드 문제 발생 이후에는, 일체 대화 채널을 닫아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두번째는, 양국 안보 문제가 발생해도 민간 교류, 양국 무역, 투자를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는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금번 합의 내용 중 정치 안보 문제가 가급적 경제, 민간 분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민간 차원에서 한중 비공식 교류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의견을 좁히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고위 투자자들을 만나고, 미국과 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일본에도 여러 채널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한 것을 해야 한다. 민간 교류와 협력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양국 간 경제적 보완성을 확충시키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양국간 경제적 보완 역할을 하였는데,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산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를 협력적 방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도자간 신뢰 및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는 원칙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하며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중국을 타겟팅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장후이지 앞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사드 때문에 일순간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였고 특히 여행 제재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 국민들이 한국상품을 좋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경제 산업 구조에 있어 수교 당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평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경쟁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중간 경쟁 마찰이 모두 사드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 마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성환 한국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작년 대외 투자 증가율이 줄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서, 윈윈하는 경우에만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세션 평화1

2017년 11월 2일(목)

13:00-14:30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풍부한 어족 자원과 천해의 환경을 품고 있는 서해는 한반도 분단의 비참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휴전 이래, 서해는 남북 간 대결과 충돌로 얼룩졌다. 1,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로 서해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화약고로 여겨졌다. 이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주창되어온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남북 간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해 그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들어본다.

사회자 |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토론자 |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센터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서해는 남한과 북한 양국에게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임.
- 서해에서 남북한의 무력충돌을 억제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해 지역을 공동어업지역으로 만들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음.
- 서해에 인접한 국가들은 서해는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구역이라는 공감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함.


존 델러리


김종대


로버트 칼린


정지용

김종대 나는 서해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남북한의 교전을 취재했고 그에 관한 책을 썼다. 서해에서의 남북 갈등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서해 문제는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다. 원래 연평어장은 조기가 많이 잡혔는데 1980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 중반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게가 출몰하기 시작한다. 꽃게를 잡기 위해서 남북한 어선들이 몰려들었고 그 어선들 사이로 남북한 함정이 대치했다. 남북한 어선들이 뒤엉키고 함정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1999년에 기록적인 꽃게 풍년으로 인하여 70퍼센트에 육박하는 어업이 연평이라는 좁은 해협에서 이루어졌다. 꽃게잡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좋은 외화벌이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어선들이 서해에서 꽃게를 잡았고 그에 따라서 남북한 함정들도 증가했다.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99년 1차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북한에 비해 남한은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채 교전이 끝났다. 교전이 끝나고 나서도 남북한 어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2000년 초반에는 더 많은 꽃게가 몰려들어 1만5천 톤의 꽃게를 수확하게 된다. 1차 교전으로부터 3년 뒤인 2002년에 서해에서 또 다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다. 1차 서해교전 당시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2차 서해교전에서 고속정 1척 침몰, 6명 사망, 19명 부상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많던 꽃게가 2003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2003년 꽃게 어획량은 7천톤 그리고 2004년에는 1천톤으로 줄어들더니 2005년부터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4월부터 자취를 감췄던 꽃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다시 남북한 어선들이 서해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꽃게 어선을 보호하던 남한의 해군함정 천안함이 백령도해안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 서해에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꽃게의 수가 줄어들더니 후반부터 다시 꽃게 수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무력충돌 사례들을 보면 서해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어업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섬, 특히 연평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서해를 보다 평화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있었다. 남북 정부가 얘기한 것 중 하나는 서해의 일부를 공동어업구역으로 지정해서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남북의 NLL 경계선을 군사적 충돌의 라인이 아니라 평화의 라인으로 만들고 공동어업지역을 5구역으로 나누는 협의가 거의 이루어질 뻔 했으나 NLL에 대한 남북한의 견해 차이로 공동어업 제안은 실패로 끝난다. 사실 국제법의 무해통항권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해양영토에도 무기가 없는 어선들이 접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북한은 NLL을 봉쇄선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여태까지 NLL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무력 충돌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가 이득을 보는, 평화의 기준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상에서의 경계선은 철조망 같은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간의 약속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약속을 위반하는 순간 합의가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북한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경제, 안보를 유지하는 서해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북한과 서해를 두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위기관리체제, 핫라인,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군사적 협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협력들이 부재한 탓에 NLL에 남북한 어선 접근이 금지되었고 이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100척에서 500척 단위로 서해에 들어와 아무도 건들이지 않는 수산자원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남북간의 문제가 이제 국제적 문제로 변하고 있다. 서해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으며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사안이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인천 영종도공항이 북한과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서해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대부분 공격 전력이 서해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한 군사력의 65퍼센트도 서해에 포진하고 있다. 서해에서 충돌이 있을 경우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제는 협력을 확장해서 서해를 남북한의 공동경비구역으로 만들어 어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법어업을 막아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득을 보는 합리적 수산 협력이 필요하다.

로버트 칼린 나는 서해를 40년 정도 연구해왔는데 계속 새로운 긴장의 국면이 생긴다. 긴장이 생겼다 적어졌다 하지만 긴장은 항상 있다. 남북간 가장 심각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서해다.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고 가속화 되면서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해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데 서해에 평화가 없으면 지역에도 평화가 없다. 한반도 역시 서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해에 평화가 없으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없다. 따라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에 산다고 하자. 3층에 가보니 평화-안보라는 스위트룸이 있고 2층에는 비핵화라는 스위트룸이 있으며 1층에는 중국-한국 관계라는 스위트룸이 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서 보일러실로 가보니 서해라는 기름이 가득 찬 창고가 있다. 불만 잘 못 붙으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공간이다. 이 공간이 날아가면 중국, 비핵화, 한반도 평화도 모두 날아간다. 오랫동안 그런 석유 창고가 있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어떻게 하면 지하에서 기름을 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충돌에 따른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의 중심에 있는 각 나라의 리더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가 나뉘어 졌을 때 한국의 어업을 하는 배들이 NLL에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는 MDL을 얘기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 했고 그들 스스로 원하는 라인을 만든다고 했다. 서해의 분쟁 요소들은 NLL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 국가의 자부심이라던지 국내 정치, 안보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영향을 미쳤다. 공동어업구역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 되야 만들 수 있다. 2001년 남북 정상이 공동 구역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남북한 국내 정치의 영향으로 인해 협력에 차질이 생겼다. 공동어업구역으로 가려면 이미 남북이 갖고 있는 제한이라던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기름통을 그냥 내버려 둬선 안된다.

2014년 남북한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를 세계평화공원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서해로 까지 확대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싶다. 북한이 이런 계획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었나 싶다. 북한이 그때 서해에서의 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2013년 북한 정부가 경제특구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황해남도가 새로운 경제특구명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6년 제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이 서해를 이야기하면서 서해상의 긴장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서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서해에서 군사모의훈련을 하면서 서해 문제가 잊혀지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서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서해의 문제는 1953년에 만들어진 휴전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외에 참여해야 할 국가들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의 열쇠는 남과 북이 갖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 3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과 별개로 남북간의 군-민관 합동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싶다. 남북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강령이 만들어지면 서해상의 사고를 방지, 억제하고 그에 따라 긴장이 완화되면 서해를 공동어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 긴장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 양쪽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서해와 핵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핵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서해에서의 문제해결은 핵문제 해결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정지용 황해 문제는 안보, 외교, 북핵이 얽힌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황해는 한반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지만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한국과 중국의 서해에서의 해양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에는 실업한 어민들이 많은데 한국 해경이 폭력으로 중국어선을 제압하는 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해양자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어민들이 해안에서 꽤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전 세계에 중국어선이 넘친다. 서해에서의 문제는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다. 중국의 논리는 먼저 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드 문제로 멀어졌던 한중 관계가 최근 회복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안보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에 있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드 문제를 적절히 빨리 회복하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서해에서 남북 간의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 진전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 탁상공론에 그쳤을 뿐이다. 남한은 과거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실천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해야한다. 북한과의 문제가 통제 불가능이 되면 피해를 받는 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국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같다. 6.25 전쟁이 대국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듯이 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황해에서의 평화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 일단 황해에는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황해는 동아시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황해에서의 갈등 해소는 경제 협력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황해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화 시키지 말자. 단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치 문제로 확대 해석하면 풀 수 없다. 그리고 한, 중, 일 운명공동체를 제안하고 싶다.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한중 수교 이후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도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한중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겉보기에 한국과 중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는 성과도 많았지만 2003년 고구려 문제와 사드 문제와 같은 의견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가지며 '한국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Q&A |

존 델러리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김정은이 서해에서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원할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지 서로 얘기해보자.

김종대 북한은 서해를 통해서 평양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고 싶을 것이다. 서해에서 한미연합전력과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우수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어떠한 군함이건 상선이건 NLL을 통과할 수 없게 봉쇄하고 있다. 서해는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다. 이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앞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려면 서해가 중요하다. NLL이 봉쇄되어 있는 한 북한은 세계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 연안에서의 발전을 위해 국제봉쇄해제, 자유로운 항해와 조업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평양까지 압박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해결되길 원할 것이다. 평양으로부터 17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국의 섬 백령도에 군사가 배치되어 있어 북한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로서는 서해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불리한 군사, 정치, 경제적 요소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로버트 칼린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김정은과 그의 보좌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NLL 봉쇄로 인해 북한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NLL에서의 충돌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북한은 휴전협정의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며 재협상을 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존 델러리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황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정지용 우선 황해는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자. NLL은 북한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남한의 연평도 군사기지는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NLL에서 충돌이 발생한다해도 그것이 남북간의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김정은이 서해에서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껴 한국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올해 유엔 결의문 발표로 인해 북한의 해운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경제발전 측면으로 봤을 때 서해가 중요하다. 서해는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을 갖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작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유엔 제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외화, 무역,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북중 관계는 2014년부터 냉각기에 빠졌고 정부와 언론이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북중 관계의 역사로 봤을 때 지금은 좋지 않은 시점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중국의 19차 당대회에 축전을 보내며 중국에 대한 불만이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국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교류한다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서해 평화 구축에 있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북중 관계 문제의 핵심은 북핵이다. 북한에서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중 관계가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존 델러리 김종대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다. 공동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했는데 북한과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김종대 서해에서의 남북관계의 평화는 상대방의 경고를 얼마나 빨리 받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북한 표류어선을 북한 정부에게 송환했다. 그런데 송환 의사를 휴전선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육성으로 전달했다. 북한측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른 채 남한의 함정이 복귀했고 그 다음 날 표류 어선을 송환하려고 나와보니 북한측에서 알고 나와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남한과 북한은 군사회담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왜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것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제적 대북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왜 한국이 먼저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냐며 군사회담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한국 정부는 핵문제에 관련해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남북 간의 충돌을 제제하려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인데 왜 미국이 막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존 델러리 아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서해에서의 남북 협력의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로버트 칼린 기회의 창문은 열렸다가 닫히기도 한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긴 했었다. 지난 2년동안 그런 시도가 있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서해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정부 관계자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협력을 통해서 서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Q1 김종대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서해에 어떻게 평화협력 지대를 구축하는 것인데 서해에서의 문제는 남북간의 복잡한 관계가 해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서해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어떻게 지금의 교착상태에서 양자간의 선의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서해를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 장소로 볼 수 있는가? 북한의 노동당 회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북한 정부는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압박이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북한은 어떤 카드를 내놓으려 할까? 그리고 남한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는가?

김종대 서해에는 분쟁 지역이 3개가 있다. 서해, 다위다오/센카쿠 그리고 타이완 해협이다. 남북한 간의 서해 문제는 NLL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격려하는 한편, 서해 주변국가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지 않나 싶다. 서해에서의 공동의 안보가 필요하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등 이해의 당사자들이 서해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의 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포럼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황해포럼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하지 않나 싶다. 우리는 공감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역설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재난을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이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남북 문제가 서해에서 터지면 서해 근처 국가들도 긴장을 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중국이 긴장하였다. 이렇듯 서해 문제는 국지전으로부터 국제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해의 안보를 위해서 국제대화와 남북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세션 평화2

2017년 11월 2일(목)

13:00-14:30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최근 ‘군함도’란 영화가 개봉되어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영화를 본 한국인들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중일 3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분쟁은 동북아평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역사 갈등의 문제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최대의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한중일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문제, 영토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과 아울러 3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세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자 | 김은숙 (한국교원대 교수)

토론자 |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부학장 및 이사)
판은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원)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재판기록을 활용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 평화기념관 등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외국인 지향적인 전시를 기획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해야 함.
-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함.
- 역사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논의와 함께 지역과 시민 차원에서의 상호 협력이라는 투 트랙이 필요함. 한중일이 공유하는 백제문화를 활용한 문화교류를 제안함.


김은숙


우메노 마사노부


판은쉬


윤용혁

김은숙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안희정 지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한중일 삼국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세션에서는 각국의 입장에서 '환황해'와 관련해 역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논의해 나갈 것이다. 먼저 우메노 교수님 말씀하시겠다.

우메노 마사노부 최근에 군함도, 일본에서는 하시마(端島)라고 하는 곳이 이슈가 되고 있다. 화제가 되기 전부터 나가사키 등의 인권단체에서는 군함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오카 마사하루씨는 목사이자 나가사키시 의회의 의원으로 군함도에 대해 일찍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2005년에 발간된 이 소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군함도에서 도망친 조선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군함도에서 중국이나 조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각국은 사실에 기반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 전후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합의가 진행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연구자들에게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 일본에는 다양한 검정교과서가 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분량이 출판사마다 상이하다. 마나비야(学び舎)의 경우 강제징용이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 많은 분량을 소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채택율이 높지 않다. 나다 중학교의 교장이 마나비야의 교과서를 채택하자 지역의 의원들이 심하게 항의했고 이를 언론에서도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교장이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교과서 채택에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것은 중학교 교사들인데 문제의식을 갖고 집필한 만큼 내용적으로 충실하며 채택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또한 이쿠호샤(育鵬社)에서 출판한 교과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마나비야와 마찬가지로 전쟁 말기에 조선이나 대만에서 강제징용과 징병이 있었고 심한 노역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직교 출판사의 교과서의 경우도 교사가 집필한 것인데 종군위안부나 보상문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에서는 민간의 공동연구가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 이원순 서울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일교류역사교과서가 집중적으로 집필되었으며 '미래를 여는 역사',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라는 책들이 차례차례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연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역사교과서의 공동집필에 있어서 한계는 출판해도 정작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적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연행의 문제가, 중국에서는 난징대학살과 731부대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이에나가 재판을 살펴보겠다. 이에나가는 자신이 난징대학살이나 일본군 잔학행위에 대해 집필한 내용이 검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 것에 대해 32년에 걸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거듭해 최종적으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집필한 내용을 검정과정에서 수정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일 양국에서 역사교과서의 공동집필이 이뤄지기 힘든 이유에는 일본학자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기술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교과서에 남아있다는 것을 이 재판에서 알 수 있다.

전후 보상에 대한 재판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의를 갖는다. 강제연행과 위안부, 731부대의 세균전에 대한 재판들이 약 80건이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판례가 지방재판소에서는 승소했으나 고등재판소나 최고재판소에서는 패소했다. 그 이유로는 전후보상은 이미 각 국가와의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것과 보상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에서 승패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결과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942년 국가 관리인 순경이 연행을 하고자 감시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권력작용으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도쿄 고등재판소,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종군

위안부 보상 재판도 있었다. 물론 패소한 재판이 많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역사학자들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종군위안부와 여자 정신대, 그리고 그들을 연행하는 그림이다. 아래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라고 판넬이 붙어있다. 한국인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이 판넬만 보고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다음 사진은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오키나와 전쟁 때의 기록이다. 오키나와 현에 있었던 종군위안부 위안시설에 대한 기록도 있고 옥쇄사건처럼 오키나와 현민들이 일본 군인에 의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증언도 남아있다.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일본 군인들의 사진도 있는데 원래는 총부리가 주민들을 향해 있었으나 정치적 압력으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독립기념관 역시 사료를 바탕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외국인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들을 포함해서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 일요일'이라는 영화는 북아일랜드와 영국정부의 분쟁을 주제로 한다. 30년간 영국정부는 이 분쟁이 IRA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해왔지만 영화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런던올림픽 직전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정부가 정치적 분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정치적 화해와 결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며 사실 확인 없이 사죄만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판은쉬 저는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학술적인 사고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다. 우메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견은 많은 문제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은 사드 문제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역사문제가 존재했다. 삼국 간의 FTA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에도 역사문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떤 이견이 있었고 이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겠다.

먼저 역사학은 인문학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공학과는 다르게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학술적인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이견이 일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감정과 정서적 감정의 두 가지 요인이 이견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역사 발전의 기반이 되어왔다. 정치가들은 자국의 민족성을 정치인으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특히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것이 이견이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다. 정서적 감정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애국'정서가 학자들에게도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학자는 학술적 판단에 자신의 민족적 정서를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역사적 이견의 발생원인에는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세가지 요소가 있다. 첫번째는 정치주도형이며 두번째로 학술주도형 마지막으로 학술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가 있다. 정치주도형의 경우 주로 한중일간의 근현대사 해석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중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데에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주도형이라는 것은 사료도 충분하고 역사적 결론도 분명하게 내릴 수 있지만 정치적 요소가 개입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간의 협상과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도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공동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채택율이 낮다.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학자들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 실천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학술주도형의 경우 시대적으로 현재와 거리가 있지만 사료는 충분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이다. 그 이외의 요인때문에 이견이 확산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비교적 적다. 예를 들어 한중의 학자들 사이에 청대의 국경선에 대한 이견이 있다. 당시에 청나라에서 목금동이라는 사람이 국경 획정을 위해 파견되었다. 여기서 목금등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사진에서 세 개의 빨간 선을 보면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래쪽의 송달이 국경선이었다는 관점과 가장 위쪽의 두만강 원류의 지류인 홍토수가 국경선이었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 간에 존재했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두만강의 경우 조선에서는 중국 경내에 있는 해란강으로 인식했는데 여기서 국경 획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이후 간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한 지도가 사료로 남겨져 있어 간도 분쟁 역시 정치적 문제가 개입될 여지는 적다. 학술주도형 이견에서는 학자 간의 교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적인 요소에 민족 정서가 결합된 문제는 정치주도형이나 학술주도형보다 더 복잡하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이 유형의 경우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이견이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나오기보다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론(史論)에서 발생하게 된다. 연구자가 갖는 사론은 그가 주로 어떤 사료를 다루는지, 신분과 배경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첨예화되는 과정에는 정서적 요소, 특히 민족정서가 분명하게 작용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결론 내리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당시의 사론이 틀렸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간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식이 다르다. 고구려의 고분과 벽화에 대한 해석 그리고 청나라 때의 조공-책봉 관계처럼 고대사나 중세사에서도 양국간의 상이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의 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사론이라는 것이 학자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독자적인 사관과 민족 정서를 가지고 상이한 결론을 내린다. 그들 사이의 접합점을 찾기 위해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통한 구동존이(求同存異)와 더불어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에게 비이성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학자는 사론의 영향에 필연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하다. 차이점은 남겨두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하며 사료 협력을 기반으로 학술교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공-책봉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일 삼국이 모두 연관된다. 사료적 측면에서 고구려의 최대 영토가 중국 대륙에 걸쳐 있으므로 한중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사관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핵심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 역사에는 정치적 공통성이 존재한다. 체제론에 있어서도 사관의 영향으로 상이한 인식이 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역시 과거에서 현재에 걸쳐 변화해왔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분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의 사관을 갖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의 사관을 갖기 때문에 민족의 원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출발점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윤용혁 역사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전략에 대해 '환황해권'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역사 문제라는 것이 국가 간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어떻게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즉 역사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사실을 밝혀 나가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상호협력증진의 방향을 고민하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황해권이라는 개념은 국가간 개념이기 보다는 지역간 협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논의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의 문화기반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몇 차례의 강한 시련과 갈등을 겪었다. 특히 20세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험을 겪었다. 우리 세대에는 파괴된 동아시아의 세계를 복구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왔다. 1996~1997년에 걸쳐 쓰쿠바 대학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연구를 했었다. 중세 한일교류사를 기술하고 있는 관점,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 일본 교과서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었고 특히 역사교과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기였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역사교과서에 종군위안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술되었다. 물론 다른 한편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힘겨루기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해소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진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현재 우리들이 공유하는 문제의 특징을 비추고 있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트랙인 상호협력증진에 대해 말해보겠다. 환황해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황해를 중심으로 지역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역사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서로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로 만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호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역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날 것이다. 지역과 시민 차원에서 역사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교류를 늘려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포럼이 열리고 있는 공주는 1500년 전 백제의 수도였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환황해권 그리고 동아시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트랙으로 백제문화와 백제정신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백제라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켜 고대 일본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고대 국가이다. 한중일 삼국이 속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중심에 백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1세기에도 백제정신을 복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가 대표적이다. '세계를 만나다', '한류 원조'와 같은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백제문화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역사 축제이며 환황해권과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63회 백제문화제의 개막식의 무대 뒤편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었다. 국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여기서 백제문화제는 단순한 역사축제가 아니라 환황해권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축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령왕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는 가라쓰 섬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무령왕이라는 인물을 컨텐츠로 삼아 매년 시민 교류활동을 하고 공동 모금을 통해 기념비를 세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무령왕'과 '공주'라는 별을 등록하고 무령왕 별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를 계기로 공주에서 반출되어 일본에서 소장 중이던 문화재가 한국으로 반환되어 현재 충남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역사갈등을 해소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문구로 인해 소송까지 갔던 이삼평 기념비의 경우 재판 이후 이삼평 연구회라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어 기념비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기념비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있었지만 연구회가 여러 주체 간의 중재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 준공식 때는 기념비를 세웠던 아리타 지역의 유지들도 참석해 더 발전된 한일 관계를 보여주었다. 모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사례이다. 역사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교과서 문제 등은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지역과 시민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주로 자국사와 세계사로 구분되는 데 한국의 중등교육에는 '동아시아사'라는 또 다른 세계사가 존재한다. 아직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역사 교과 안에 포함된 것은 고무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사 갈등을 다룰 때 갈등의 내용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이뤄져온 노력들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Q&A |

김은숙 상호의견 교류를 위해 우메노 교수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다.

판은쉬 정치적 요소에 의한 역사적 이견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에 대해 내 생각과 우메노 교수님의 발표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윤용혁 교수님이 동아시아사를 언급하셨는데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EU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쌓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상의 교류는 우리의 통합과 신뢰의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공주에서도 백제의 문화를 기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협력의 길을 닦아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것들은 미래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적 공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협력이 이뤄진다면 더 나아가 활발한 경제무역관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용혁 일본의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인식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역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게 보인다. 나가사키와 오키나와의 사례를 말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만 서술되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일본이 피해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메노 마사노부 우선 판은쉬 교수님의 분석에 저도 굉장히 공감했다. 윤용혁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자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일본이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8월 15일을 승리의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역사 인식에 대해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전시가 조금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나가사키 평화기념관에서는 원폭 전시가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나가사키 지역 내에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온 강제노역자들의 집락촌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다. 연구자로서 역사에 있어서 은폐 행위가 없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숙 판은쉬 선생님에 대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린다.

우메노 마사노부 판은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서적 요소라는 부분에 공감한다. 한중일 3개국이 공동연구를 통해 집필한 역사 교과서는 좋은 교재이지만 실제로 검정교과서는 아니다. 그래서 판매율이 저조한 면도 있다. 하지만 집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 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국가와 같은 정치적 압력이 도와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지원도 없고 동력이 부족하다.

윤용혁 판은쉬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호교류에서 특히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들과 우리도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통로가 명확하지 않다.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개인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판은쉬 우메노 교수님이 일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다. 공동 편찬 교과서가 일본 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계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될 것이니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용혁 교수님이 질문하신 소통의 통로에 있어서는 여러 학술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많다면 서로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메노 마사노부 시민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는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Q1 윤용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의 백제 문화제라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통해 한중일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은쉬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학술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민간교류를 제안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우메노 마사노부 근현대를 넘어서 그 이전에도 나가사키는 중국과 한국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오키나와 역시 류큐 왕국시절에 일본, 조선, 중국과 관계를 맺어왔다. 앞으로도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면 좋겠다.

판은쉬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학술기관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학술적인 교류나 포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민간교류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본세션 번영1

2017년 11월 2일(목)

14:50-16:20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의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국내 경제의 중심으로서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없이는 대기업 중심 경제라는 체질을 개선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 벤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과 이와 관련한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한다.

사회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자오유푸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미츠이 이츠토모 (가에츠대학 대학원 대학원장 및 교수)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중소기업은 한중일 삼국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열쇠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시됨.
- 중소기업의 육성은 취업시장의 활성화 등 소득주도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임.
- 한중일 삼국은 중앙 정부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함.


안충영


이동주


자오유푸


미츠이 이츠모토

안충영 환황해 포럼을 처음부터 설립한 사람으로써, 안보외교와 같은 이슈들을 논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접근' 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삼국의 번영을 위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설계할 때,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청남도 경제를 볼 때, 중국 산동성이나 일본 규슈지방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치는 중요하다. 한국 기준 업체 수의 99퍼센트, 그리고 고용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충남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번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를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통한 방식으로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중일 3국 생산량의 50-6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 또한 압도적이다. 이른바 "New normal" 이라는 저성장, 저고용의 시대가 전개되고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잘 이겨내느냐의 여부는 바로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생산력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지향형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후 b2b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른바 "Global Regional Supply Chain" 에 동참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도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70퍼센트이며, 벤처 관련 혁신 창업은 30퍼센트도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충청남도가 동시에 안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내수지향형인 중소기업을 글로벌화 시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산동성과 한국의 충청남도와 일본의 규수지방은 상호 오고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즉 Supply Chain이 생성되기 용이하다. 게다가, 4차혁명으로 인해 산업 기술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3국의 기업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들여다 보자.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겠는가를 탐색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이동주 중소기업이 어떻게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얘기보다 좋은 기업이 지방에서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은 주장들은 상당히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 치우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현재 한국 경제정치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혹자는 4차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산업이 새로운 융합과 복합을 통해 기존의 생산구조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이 혁명은 사업체 혹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소일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은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좌절할 것이다. 4차 산업은 기업간에 융합과 복합을, 즉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중요시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도요타라는 기업은 '하청'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하청'이라는 표현이 '횡청'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이다. 이 변화는 네트워크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가 현 정부의 목표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각 시대마다 성공적인 모습이 있다. 60년대나 70년대에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양산형 중소기업, 이른바 지배적 중소기업이 생산되었다.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간단한 소비재를 다량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주화로 인해, 혹은 국민들의 소비욕구 다양화와 세계화로 인해 상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개별 니즈를 찾아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생겨났다. 이것을 소프트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개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발 지향적 중소기업이 성장했다. 따라서 4차혁명에서는 창조형 기업, 즉 시장을 창조하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겨냥해서 적절한 지역에 배분하는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를 고민한다. 그러한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현재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어렵다. 결국 기업은 혼자가 아닌 네트워크, 즉 기업과 기업 외의 조직과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생태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각 분야의 생태계가 어떻게 선순환으로 작동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개별적 관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각 지역의 고민

이어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또는 다른 기업을 어떻게 우리 지방에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주요한 주제는 '글로벌'이다.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그것에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업의 성과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급 네트워크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국 내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중일의 협력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연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구매자를 찾아 구매상담을 해준다든지 같은 수직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중일 삼국의 수평적 분업체계 안에서 협력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비단 한국에서의 융합뿐만 아니라, 삼국의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 즉 협력자의 탐색을 도와야 한다. 수출도 한시적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 수출을 외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질문이다. 최근 한중일 간의 융합형 네트워크형 조직이 성장하므로, 중소기업들은 이것을 시험 삼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산업에 따라 한국보다 중국에서 창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중소기업의 탄생과 성장, 생태계를 보유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그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지역산업을 육성하려면 다양한 기업 생태계의 수준을 검토해서, 그러한 생태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리고 제고한 후 어떻게 중국과 일본의 생태계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안충영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자라는 말 공감한다. 윈윈형 관계를 통해, 다시 말해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그것들이 결국 서비스형 중소기업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공감한다. 다음은 일본의 사례를 듣자.

미츠이 이츠토모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말씀 드리려 한다. 일본의 경제발전에 중소기업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고용기회창출 측면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일본은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실패로 전환점을 맞았다. 중소기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중소기업헌장 안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은 중소기업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년동안 20퍼센트가 줄었고, 이대로 가면 더 줄어들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를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백서에도 나와있듯 중소기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올 줄 몰랐다. 일본이 이렇게 중소기업이 쇠퇴하는 이유는 정책과제의 문제이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의 산업을 이어온 산지산업, 지역산업 부문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지금 있는 기업이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적은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많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80년대 이후 수출이 쇠퇴했다. 줄어든 수출량을 산지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려는 정책이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정책이 크게 전환됐다. 최근 산지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지역자원활용, 농상공연계, 지역 브랜딩이 그것들이다. 지역자원활용은 과거의 산지라는 지역을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산지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접근해야 한다. 과거 산지의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세계시장으로 나가서 기업들과 연계하는 발상을 해야 한다.

농상공연계는 지역산업을 새로운 산업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뛰어난 소재를 활용해서 농상공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이 10년 동안 축적되어왔다.

지역 브랜딩은 지역의 이름과 상품을 새로 접목시키는, 새로운 물건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파는 것이다. 성공적인 예를 들자면, 다카호카시 안에 토야마라는 전통산업이 있는데, 불상을 만드는 산업이다. 요새 잘 팔리지는 않지만, 세계의 전략으로 산지원조를 받았고, 새로운 컨셉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을 다루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엄청 많이 팔렸다. 국제화도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장은 산지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그러나 기존의 것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후계자의 문제를 들어보겠다. 기업을 팔거나 합병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중소기업이 가족 중심의 사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일본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다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더 잘 해줬으면 하는 기업이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가족간의 후계자 승계가 불가할 시 다른 곳에서 데려올 수는 있으나, 제3자

승계는 어려운 점이 많다. 가족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제3자를 고용하고 간부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은 가족간의 관계나 돈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개인보증을 자주 하는데, 개인보증을 하면 후계자 승계 시 외부사람을 들여오기 힘들어진다. 후계자 승계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단지 기업 승계가 일어나기 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돈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관점이 생겼다. 중소기업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고, 사업승계와 관련된 사업승계계획 5개년도 만들었다. 은행이 대출을 했을 때 개인보증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세제를 해준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주지는 않지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기대응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백서에도 언급되어 있듯, 기업 승계의 문제는 돈, 자산, 경영권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이념 등이 승계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승계는 단순한 경영권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가능한 경영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업 승계는 좋은 혁신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승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안충영 말씀 감사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자원이용, 농상공연계 등을 참고해야 한다. 가업승계문제도 최근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모습이 일본의 장점이 아닌가도 생각이 든다. 항상 선순환을 강조하시는데, 경영철학이 공생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풍토와는 다르고, 우리가 답습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도 상당히 전환점에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둥성과 충청남도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듣고 싶다.



자오유푸 내가 오늘 할 이야기는 주로 취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취업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 보겠다.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매년 1600만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취업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체 취업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소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는데, 계속 취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발전을 도모하고 더 많은 취업 인구를 담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정책과 아주 긴밀하다. 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되었듯 중국은 경제부문에서 여러 가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시기에 따른 정책을 맡고 있다. 첫 번째로, 2014년 이전의 정책은 구조적인 개혁을 강조했는데, 새로운 경제정책의 동향도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특색의 혁신적인 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적인 동력으로 쓰는 것, 국민들이 열정을 가지는 것이 30년간의 정책목적이다. 최근에 그러한 혁신에 있어서 좀 더 강조가 되는 현 정책의 목표는 과거와 좀 다른 점은 GDP지표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총량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커졌는지 등의 경제발전의 질을 강조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국 경제정책의 목표이다. 마지막은 중국은 중앙중심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취업정책은 호재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취업정책에 있어서 혁신체제, 대중창업, 만중창신이라는 슬로건이 앞으로도 깊이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우선 중국의 취업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한 GDP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노동자가, 그리고 창업자가 스스로의 기회를 만들게 하고 싶다. 중앙이건 지방정부건, 정책의 핵심은 혁신이다. 지방정부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취업정책은 서로 중국 지역 내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존재한다. 취업시험기지가 존재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과가 없으면 보조금은 반환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취업을 조성한다. 대학생들은 혁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전환기금도 있다. 협력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해 정부가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기금을 확대할지를 결정한다. 지방정부는 기업들을 혁신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격이 갖춰진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력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은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존재한다. 많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친다. 지방정부가 학생이나 실업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고, 사회보험 방식의

보험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돼서 대학에 남거나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많은데, 기업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하면 받게 되는 보조금도 있다. 고용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정책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분야는 하이테크 그리고 인터넷 기업 등인데, 그 분야에서 고용자수가 늘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정부는 굉장히 노력 중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생존이 쉽지 않은데, 생존만 한다면 사실은 기업의 고유 특색을 통해 생존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기술적인 능력, 업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게다가 중국의 두자녀정책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것은 꽤 중요하다. 과거의 산아제한정책보다 완화된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40년동안 산아제한정책이 없었다면 인구가 더 많았을 것이다. 중국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경우, 상당수의 노동력이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두자녀정책으로 인해, 20년 이후에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노동자들은, 조금의 압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 Q&A |

안충영 중국의 특색을 가진 정책, 보조금, 취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한다.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다. 이동주 본부장님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가장 고민되는 것이 양극화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동주 경제가 성장할수록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수는 줄어든다. 국가의 소득수준이 3만달러에 이르면 기술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 이분들도 노력을 해서 스스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 R&D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R&D를 할 수 없다. 제조업중심의 R&D 컨셉은 한계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

안충영 답변 감사하다. 이츠토모 교수님에게 여쭈어 보겠다. 일본의 대학졸업자들 사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

미츠이 이츠토모 어려운 질문인데, 대졸자 중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20퍼센트는 원해서 가고 80퍼센트가 마지못해 간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베 수상이 업무의 다양화, 취직의 다양화를 내세우는데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일본의 획일화된 모습이 걱정된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인력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80퍼센트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정신혁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산지산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해왔는데, 사업자들의 글로벌시장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낮다. 산지사업자들은, 특히 이미 잘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찾으러 가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신기술을 만드는데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일본의 현실인 것 같다.

안충영 일본이 중소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감에도, 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중국은 많은 보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른바 좀비 기업이 되어버리는 양상은 어떤가? 산동성의 청도나 위해 같은 경우는 창업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강조되는가?

자오유푸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방마다 불균형적이다. 중국은 굉장히 넓고, 발전지역 자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세계에서 유망하고 유명한 기업은 상당수 선전에 있다. 선전은 금융 제도, IT 인재, 국제사회와의 접목도, 건전한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 선전은 바로 이용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전과 같은 성숙한 도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다. 산동성의 벤처기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격려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산동성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전같이 친시장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금은 대출에 대한 보조금이다. 산동대학에서도 혁신창업기지가 있는데, 은행이 프로젝트마다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상한선도 있고 제약들이 있다. 사회에서도 상업은행을 통해 창업을 많이 돕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1만 위안에 달하는 대출금을 빌려도 잘 되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지방정부가 앞으로 창업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Q1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에 질문 드리고 싶다. 저희 충남연구원

에서도 향토산업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도 하다. 그 수단 중 하나인 보조금이나 세제 등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보조금이 다 중앙정부에서 오는 정책구조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지방입장에서도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미츠이 이츠토모 제 대답이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 다만 중앙이 보조금을 관할하는 부분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노믹스의 지난 5년동안 다양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더 많이 쏠리고 있다. 물론 그것도 혁신의 방법이겠으나, 지방정부가 옛날보다 둔해지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역자체가 혁신을 하는 주체가 되는 노력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충영 사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유치를 보조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고급인력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인프라가 중요하다. 보조금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본사가 나주로 이전했는데, 거기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2 자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다.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 잘 들었다. 매출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중국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접근이 많은데, 이러한 중국의 발전이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기업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생길지 묻고 싶다.

자오유푸 중국의 발전은 한국에게 위협이 아니고 기회인 것 같다. 중국의 경제총량은 굉장히 방대한데, 중국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 최고의 공장이다. 지적재산권에서 보자면 대국이지 강국은 아니다. 규모는 크지만 산업의 형식 등의 질적 측면은 낮다. 한국의 기업들은 충분히 협력 가능하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케이크를 찾아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만의 경쟁력이 있다. 한국의 IT나 벤처기업들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위를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둘 다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의 방대한 시장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중 경제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충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린다.

이동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민은 하드웨어중심적인 지원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미츠이 이츠토모 오늘 오전부터 나눈 다양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물자나 돈은 많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오유푸 한중일 학자들이 같은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 환황해 지역의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이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인재교류를 하면 좋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한중일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충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4차산업 혁명을 잘 받아들여서 충청남도에서 일본과 중국에 상호교류를 통해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이러한 토론을 통해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세션 번영2

2017년 11월 2일(목)

14:50-16:20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황해는 한반도의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진출의 전진 기지이자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해권역을 연결하는 해상로이다. 황해는 중국을 비롯한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해상 교통 및 물류 통로로서 그 활용의 역사가 매우 깊고, 특히 첨단 항만 인프라와 철도 등을 포함한 내륙 교통 인프라가 맞물릴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황해권을 접하고 있는 충남이 한반도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사회자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발표자 |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송시궈 (중국 위해항무그룹 부사장)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 이동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북한으로 인한 위치 단절 및 주변 국가의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사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환황해 경제권의 교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 수송, 해상 수송, 해저터널 등 다양한 운송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고, 하나의 운송 수단에 몰두하기 보다는 다양한 운송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여 환황해권의 교류를 여러 교통 수단을 통해 활성화시키면서 북한의 협력 및 개발 없이도 환황해권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암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환황해 교통 네트워크의 개발에 있어서, 한국-중국-일본을 단순히 잇는 것을 넘어서,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속철도망 정비, 항구의 스마트화, 환적 및 수속 시간의 단축 등의 방안이 있음.


안병민


김시곤


송시궈


아라이 히로후미


강태호

동북아경제권 내에서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환황해 경제권은 풍부한 노동력 및 기술력, 자본과 각종 부존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서울과 평양, 중국의 북경이 속한다는 점에서, 교역량을 더욱 증가시키고 환황해 경제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의 재정비 및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로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본 세션에서는, 환황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곤 사람의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잘 도는 것인 만큼, 환황해 지역 역시 많은 물류이동과 인적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철도와 해안교통인데 오늘은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계 3대 경제권은 크게 동북아 경제권, EU 경제권, NAFTA 경제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의 초점은 환황해 경제권으로, 해당 지역에 그동안 철도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2008년부터 10년간 거주 인구수와 물동량에서 상당한 수치를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황해 지역에 철도교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철도 설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환황해권에 완전히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철도 교통에 있어서는 철저히 '섬'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서울과 평양이 모두 환황해권에 속하고, 그 외의 주요 경제 도시가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해, 남해의 풍부한 수자원을 갖추었으며, 수도권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공항'이라는 시설 역시 인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면 피가 돌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철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환황해권에 국제철도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오직 철도만을 통해서 남한의 경제권을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전체의 부와 번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으로의 이동은 물류를 항구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해운을 이용하는 이유는 철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해상운송을 통한 물동량의 운임비는 철도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비싸며, 철도로 운송수단을 변경한다면 약 톤당 50달러의 운임절약효과가 있다. 둘째, 북한 접경지역인 창춘, 지린, 투먼, 나진, 훈춘 등의 지역에 풍부한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하여 신의주와 나진에서부터는 이미 철도 인프라가 설비되어 있다. 남한 쪽과 북한 인접지역의 중국 쪽 철도가 이미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북한만 연결하면 저절로 환황해 경제권 교통네트워크가 연결된다.

남한부터 북한을 지나서 북경까지 가는 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도시를 통과한다면 고속철도망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북한에는 특수경제지대로 4개의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선 경제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가 있다. 가장 중요한 축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축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축은 원산과 나진을 잇는 축이 된다. 이 축을 연결한다면, 서울, 인천공항, 신의주, 나진, 목포, 부산이 다 연결 가능해지는데, 이는 곧 한반도 전체의 주요 거점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의선 축의 경우, 개성, 평양, 신의주를, 나진 측의 경우 원산, 함흥, 청진, 나진시가 주요 통과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도시가 인구 규모 측면에서 바로 북한의 7대 도시에 해당한다. 한반도로 확대하여 보면, 이 국제철도망은 반드시 서울을 통과해야 하며, 인천국제공항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을 통과하여 환황해 경제권을 이을 수 있는 국제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허락이나 개방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북한을 통하지 않고도 국제철도노선을 통해 우리가 이웃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줘야 한다. 해저터널이 건설된 이후 북한이 개방하여 북한을 통과하는 국제철도망이 완성되더라도 이는 중복투자가 아니며, 우리는 국제철도 노선 및 해저터널 두 노선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해저터널 역시 충분히 필요한 교통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향후 한-중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특정한 하나의 수단으로만은 부족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만 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황해 시대를 대비하여 물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물류철도망을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우선, 목포-새만금-군산을 잇는 물류철도노선 건설이 필요하다. 이 노선이 완성된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 지역의 물동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물류 비율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을 도라산을 통해 개성 방면으로, 철원을 통해 경원선 방면으로, 경춘선을 활용하여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속초를 통해 금강산 방면까지 연결한다면 한반도 물류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다.

송시권 웨이하이항무그룹을 대표하여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구간의 상호연결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항구 간 상호연결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 항구 기업의 핵심 경쟁력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간 물류 연결이 나날이 긴밀해지면서 물류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등이 필수가 되었고, 항구 간 고효율, 신속, 공유에 기반을 둔 상호연결 능력은 대체불가한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환황해 경제권 주위에는 13개 이상의 항구가 있으며, 이들 서로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항구간 상호 연결을 하기에 지리적 요건이 매우 좋다. 환황해 항구 간 상호 연결을 통해서 각 항구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 항구 분업 시스템의 가속화와 지역 항구 경쟁력의 강화 및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즉, 환황해 항구들의 상호 연결을 통한 상호보완은 모두가 윈윈하는 것임으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로 여겨야 한다. 지구의 70퍼센트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다면 어떤 나라와도 다 연결될 수 있다. 항구는 비행기, 고속철도 등 어떤 교통방식보다도 편리하고, 항구를 통해서만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한중 FTA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항구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항구 간 상호연결을 통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환황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웨이하이항무그룹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우선 웨이하이는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이자, 산둥반도의 핵심도시로 환황해 항구를 연결하기 위한 장점을 갖춘 도시이다. 그 장점으로는 첫째, 웨이하이 항은 황해의 북쪽, 산둥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며, 중국에서 한국 서해안을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이다. 웨이하이항에서 인천항까지는 220해리, 평택항까지는 238해리이고, 보하이만의 다롄 항까지는 93해리이다.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서 물류의 시간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해상 운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웨이하이는 또, 한중 공식 수교 이전에 민간 수교 차원에서 인천항과 연결이 되었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둘째, 조밀한 항로 배치 역시 웨이하이의 장점이다. 웨이하이항은 현재 한국, 일본, 칭다오, 다롄, 황푸를 잇는 국제 및 국내의 컨테이너 간선, 지선을 다양하게 개설하였고, 국제 및 국내 여객선의 경우 매월 200여 차례 운행하고 있다. 한국으로 오는 여객 정기선은 매주 6회 운항하는데 한국까지 13시간이면 도착한다. 셋째, 해상뿐만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로도 편리하게 연결된다. 수강고속도로는 항구지역에서부터 직접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수강철도 역시 항구에 직접 통하기 때문에 전국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넷째, 고효율의 통관환경을 자랑한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당일 즉시 통관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현재 구축 중이다. 광저우 지역에서 한국으로 간 화물의 경우, 공장부터 한국에 내릴 때까지 총 3일 반이 소요된다. 쑤저우, 이우 지역의 경우, 총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화물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에 내릴 때까지 총 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섯째는 항구의 대외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항구의 3,4기 터미널은 현재 전부 대외 개방되었고, 국가 육류 수입항구, 해상 우편배달 항구, 해운 특급 화물 항구 역시 허가를 획득하여 국제적인 항구 수준으로 개방 정도를 향상 시켰다.

오랜 기간동안 항구간 상호연결을 목표로 해온 웨이하이항은 '투트랙 전략, 전자상거래 지원, 하드웨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상 항로를 확대하였다. 1990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기도 전에 웨이하이와 인천을 잇는 한중 해상항로가 개설되었다. 이 항로는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한중경제무역과 문화교류의 '해상 금교'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중국에서 한중 육해운송 연계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3월에는 한국인 여행객 5명이 2대의 자동차를 타고 인천-웨이하이 여객선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여, 웨이하이항 최초의 한국인 자동차 여행객이 되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동반 입국하는 자동차 여행모델은 전국 최초로 꼽히기도 한다. 2016년부터는 웨이하이-단둥항 여객항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보하이만의 수상 소형버스를 비정기적으로 개설하여 보하이만 항구의 컨테이너를 웨이하이로 환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웨이하이-부산, 웨이하이-군산, 웨이하이-잉커우 항로도 증편하였다. 둘째, 컨테이너 철도 노선 개설에 힘쓰고 있다. 2016년, 웨이하이-서쑤저우, 웨이하이-광저우의 컨테이너 특수열차노선을 개설하여 항구 철도 노선과 한일 해상항로와 빈틈없는 연결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로 한일 수입전자상품,

둥베이 지역 특산물, 광저우 수출전자제품, 소상품 등 수출입 업무를 담당 중으로, 웨이하이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7년에 들어서는 쿤밍-웨이팡-웨이하이를 잇는 철도 콜드체인 물류 컨테이너열차가 개통되었는데, 이 노선이 바로 웨이하이-한국의 해상항로와 연결되는 해상육로 노선이다. 이 노선의 개통으로 동으로는 한국과, 남으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연결되는 철도 물류 채널이 형성되었다. 9월부터는 웨이하이에서 독일 함부르크와 뒤스부르크를 잇는 중유럽 화물열차가 각각 개통되었다. 이 고속 직통열차는 운행시간이 15-18일 정도로 기존 해상운송보다 20일 정도의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다. 셋째, 한중간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웨이하이항에 한중 무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보세창고물류센터, 대외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 출입국 특급화물 관리감독센터, 상품분류분배센터, 보세전시거래센터, 대외무역전자상거래기지, 한국상품해외창고 등 업무 기능지역을 구축하고 산둥 전자항구시스템, 해관, 상품검사, 배송 등의 플랫폼이 상호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형성했다. 2016년 대외 전자상거래 건수는 64만여 건으로 총액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6월 23일 웨이하이는 해운 특급 화물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하여 칭다오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 국제 해운 특급 업무를 시작한 두번째 도시가 되었다. 이후에는 더 다양한 노선을 개척하여 미국, 호주, 유럽까지 연결하는 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며, 상품이 항공으로 인천에 도착한 후, 인천에서 해운으로 웨이하이에 도착할 수 있게끔 '국제, 국내' 양방향의 투트랙 물류 채널을 개척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 항구 건설을 통하여 환황해 항구간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 혁명을 활용하여 국가 간 물류 정보 플랫폼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웨이하이-평택' 여객항로를 중심으로 중국해관의 페이퍼리스 전자통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RFID, 베이더우 및 GPS 위치 측정 기술, 3G 통신 등의 기술을 응용하고 컨테이너 육해 연계운송 업무 프로세스에서 고정식 컨테이너 도어락을 설계했다. 다섯째, 컨테이너 복합운송센터 건설을 추진하여 항구 상호연결의



하드웨어 수준을 개선 및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웨이하이항은 연간 120만 TEU의 통관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항구의 통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종합 서비스 센터 시설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웨이하이에 수출입되는 컨테이너를 통합적으로, 원스톱 관리감독을 진행하며 검역 및 통관 효율 역시 대폭 향상시켰다.

환황해 항구의 상호연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전 도모, 경험 공유, 공통 시스템, 협력 추진, 시장 공유, 강점 발휘'라는 대원칙에 따라 항구 간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확장하며 '3대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행동으로, 항구는 결국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서 주요 전략적 지위를 결정하는 만큼 정부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하고 정책 등을 통해 항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둘째는 업계의 연계 행동으로, 특히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의 체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항구 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항구연맹과 업계협회 등의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업계 연계 행동을 촉진하고 협조를 요구하여 항구 상호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는 항구의 행동으로, 항구는 스스로 역할을 부단히 확대해야 한다. 환황해 권내의 주요 항구는 항구 물류 연동의 특징에 따라서 상호 연결 플랫폼을 구축 및 적극 활용해야 하고, 양자/다자 간 정기 협력 교류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라이 히로후미 '동북아 복합수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오늘 오전 세션에서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동북아 경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일본어로 직역하면 '환일본해 경제 연구소'로 이때의 환일본해는 환동해를 의미한다. 우리는 오늘 환황해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일본해 경제연구소의 경우, 환동해의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의도로 설립된 지 25년이 흘렀으며, 역시 동북아 경제회의를 1998년부터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우리가 구상해오던 것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의 환황해 포럼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다.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국가 간 중앙정부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방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보다 더 넓고 세밀한 의미로서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시절부터 연구소에서 일하며 꿈꿔오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늘 등장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본에서 일찍이 관심을 가졌던 환동해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황해의 전망이 여러모로 더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권에 속하는 지역의 인구 수도 많고 교류도 활발하기 때문에 환황해 경제권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다.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복합수송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광역두만지역인 GTR 교통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4개국이 협력하여 수송회로를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안이 등장하였는데 유라시아 교통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해서 철도로 수송하자는 방안이다. 개인적으로 최근 교통 수송과 관련하여서, 15세기부터 시작된 해양운송의 시대가 아직 끝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점차 철도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존의 수송이 중화물과 같이 무거운 것들을 싸게 옮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소량의 것들을 가능한 빈번하고 빠르게 운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철도운송이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예시로, 호르고스 내륙항이라는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하루에도 몇 통 이상의 컨테이너가 다니는데 이 때 철도운송을 이용하면 해운보다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수송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있다. 극복해야할 난관에 대해서 흔히 물리적인 인프라 개발 및 확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물리적인 인프라의 정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물리적인 인프라, 즉, 소프트 인프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수송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 예컨대 민간 기업, 화물 운송업자, 운송기업, 정부 기관과 물류 컨설턴트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 산업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환일본해 경제연구소에서는 쑤이펀허 지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를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도착할 수 있게 운송하는 시험 선적을 진행한 적이 있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통해서 보스토치니를 지난 후 부산을 거쳐 오사카와 나고야에 도착하게 수송하였을 때, 이동 거리 자체는 압도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동 시간은 그에 맞는 수준으로 단축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쑤이펀허에서 보스토치니와 부산을 거쳐서 오사카까지는 17일이, 나고야까지는 16일이 소요되었다. 추적을 해보니 환적, 통관수속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환적 및 수속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운송 인프라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완전히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소프트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환적 및 수송 시간을 줄인다면 전체 운송 시간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외에, 개발된 노선을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사용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도 존재한다. 새로 운송 노선이 개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용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노선을 사용하면 화물이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착을 할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와 같은 걱정 및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운송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섣불리 투자하지 못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사용자의 이용과 사업자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및 투자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 Q&A |

강태호 한겨레 신문에서 주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고 전공 역시 북핵문제인데,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와 관련한 세션에 초청을 받은 이유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던 '철의 실크로드'와 같은 구상이 경의선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발표자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바로는 지정학적관점들이 지경학적관점에서 필요한 서로의 협력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중 협력이 사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 대륙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협력이어야 하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의 방향은 중국의 협력을 추구하는 대신,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미중간의 갈등 속에 일본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김시곤 교수가 발표한 많은 내용들 중, 특정 내용은 94년부터 전망해왔던 자료들도 있는 만큼 제법 오래 전부터 전망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는 잘 시행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웨이하이에서 온 송시궈 발표자의 이야기는 환황해 시대를 맞이하는 웨이하이의 관점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이해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웨이하이항과 관련하여 스마트 포트나 항구의 디지털화 등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웨이하이항의 위치를 보았을 때, 대륙으로 이동을 할 때 과연 웨이하이항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중일 협력에서 웨이하이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협력이라는 과정이 유라시아의 협력을 통해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서 비용 부담의 문제는 늘 언급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선'의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면'의 관점으로 바뀌었다. 이 때의 동북아 경제권의 개념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확장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런 지경학적, 지정학적 관점들이 물류에 투영되었을 때, 환황해나 환동해 등의 구역들이 큰 그림에 맞추어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2017년 현재 일대일로가

이야기 되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속하는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 축의 역할보다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위상 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는 환황해 지역의 노선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출발점을 보면, 한반도는 배제되어 있다는 인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환황해, 환동해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계속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해 오기는 하였지만, 시대의 상황, 중국 정책의 변화, 인구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정책이나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시곤 교수가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의 경우, 일본이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사실상 아베와 푸틴의 협력 속에 일본에서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일 해저터널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는 없다.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은 약화시켰지만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이 줄어든 부분을 완충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구상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송시궈의 발표에 대해서, GTR 지도를 참고하자면, 웨이하이는 지도에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칭다오, 랴오닝, 톈진, 다롄 등은 대륙으로의 수송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항구들로 확인할 수 있다. 웨이하이가 설정하고 있는 대륙으로의, 특히 유럽으로의 망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시안, 정주와 같은 서부의 도시들을 포함해가며 대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웨이하이는 그러한 지리적 경제성에 대해서 자기경쟁력이 부족해 보인다. 환황해 지역의 13개 항만은 서로 협력하는 문제보다도,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능적 네트워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웨이하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좁은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웨이하이는 삼각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의 남포, 우리의 인천과 연결되는 삼각 항구로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다 좁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설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왜 중국 내 다른 항구가 아닌 웨이하이항을 환황해 권의 주요 항구로 선택해야 하는지, 또 가장 국제적인 물류항인 부산항과의 연계성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Q1 김시곤 교수의 한중해저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충남도에서도 환황해권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저터널 관련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해저터널을 주제로 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경제적 이유, 혹은 인프라의 이유로 충남이 배제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지역에서는 가장 최단거리로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면서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격렬비열도'라는 섬을 관광자원화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오늘 발표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시곤 한중 해저터널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의주를 통하는 방향이나 창춘, 지린, 투먼을 통하는 방향 모두 중요하다. 한중 해저터널이 굳이 항구나 군산, 혹은 평택을 꼭 지나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충남의 서천지역을 지나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와 관련한 투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은 노선을 개발하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병민 덧붙여 말하자면, 한중 해저터널과 관련된 연구에서 충청도를 배재한 것은 전혀 아니며, 여러 방안을 고려했는데, 그 방안 중에 충청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송시귀 웨이하이 및 중국 항구 시스템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문에 감사를 표한다. 웨이하이는 중국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항구에 속한다고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와 보하이만과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해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양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적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고 우선, 인천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증진시켰다. 칭다오항이 자주 웨이하이항과 함께 언급이 되는데, 칭다오와 웨이하이는 서로 동반자와 같은 관계로, 둘을 각각의 경쟁상대 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권으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또, 한중FTA 블루경제권과 관련하여서도 한국과의 해상 연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한중무역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항구이기도 하다. 웨이하이의 지리적인 장점,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이면서 한국, 일본, 북한과 접근이 용이하고, 중국의 징진지 지역부터 양쯔강 항구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완하여 한국과의 활발한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웨이하이항에 정책적인 지원을 늘리고 있고, 리커창 총리가 웨이하이항을 시찰했을 당시, 웨이하이항을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웨이하이항이 한국과의 무역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웨이하이항 사무처를 마련하였고, 최근 군산과의 연결을 시작한 것을 토대로 하여 부산항과의 연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김시곤 오늘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여 느끼는 바는,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웨이하이항과 관련된 의문이나 질문 역시도, 우리가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 곳곳의 지방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일본 역시도 연결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 및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아라이 히로후미 김시곤 교수가 언급한 남북을 잇는 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여객의 움직임과 화물의 움직임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대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고 싶다. 더불어, 웨이하이항과 관련하여, 웨이하이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언을 몇 마디 하고 싶다. 첫째로, 다른 항구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서 온 화물의 수속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항구에서 철도로 환적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최소화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둘째는, 화물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중국 내부의 철도와 연결되는지, 철도 수송과의 인프라 설계가 중요하다. 셋째로는 중앙아시아, 몽골 등 내륙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세가지 점을 보안한다면 환황해 지역의 다른 항구들에 비해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시곤 물류의 이동보다도 인적 이동이 우선적이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때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사람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형화물의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고 묵직한 화물은 목포에서 북한까지 이미 연결은 되어있고, 다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 속도 역시 빠른 고속철도 노선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본세션 공생1

2017년 11월 2일(목)

16:40-18:10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과거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한 환황해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한·중·일 3국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환황해와 직접 맞닿고 있는 중국 동부의 지자체와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하고, 환황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본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한다. 특히 최근 환황해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산 증·양식을 통한 미래식량자원으로의 수산물 가치에 대해서 논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글로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북아 한·중·일이 글로벌 수산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한다.

사회자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발표자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장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

토론자 |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정책제안 및 시사점

- YSLME 프로젝트를 항구적인 기구로 변화시켜야 함. YSLME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기한이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해양 생태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현재 해양 생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식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한 가지로, 생태통합양식(IMTA)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수산자원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차별화하고, 이를 지자체의 로고로 사용하거나 해당 자원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여는 등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허재영


남정호


쟝이항


하마다 에이지


오운열

허재영 오늘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충남은 서해안에 위치하며, 중국과 한국, 일본은 바다로 연결된 국가들이다. 바다가 단절의 의미와 함께 연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삼국은 바다라는 유연한 매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재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수산,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이다. 둘 다 큰 의미에서는 환경의 문제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중일이 공생을 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평화, 경제의 주제로 논의를 해왔지만, 마지막 주제는 공생을 테마로 한 토론이 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황해 지역의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우리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바다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 기대가 크다.

남정호 오늘 주제가 상생과 협력과 관련한 것인데,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정책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인 평화도 중요하다. 생태계가 안정될 때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어민,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제가 남북한의 상생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사용하는 세 개의 P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 (Peace). 두 번째가 경제적 번영 (Prosperity). 세 번째가 보호 (Protection)이다.

오늘 저의 발표에는 다음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1. 황해는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2. 황해의 생태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SLME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게 바로 현재 한중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3. 현재 이 YSLME라는 거버넌스 구조는 프로젝트로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다. 이것을 항구적인 관리체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황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우리의 삶을 번영으로 이끌도록 할 수 있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어획량이 중요하다. 이는 어선이 많고 포획의 기간이 길어지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생산량 즉 물고기 양이 있는데 이것은 감소 중이다. 이는 곧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언젠가는 어족자원이 고갈될 거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 즉 GDP가 상승하고 있다. 소득 증가는 수산물의 수요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어선이 활동할 것이고, 자원량의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다음은 갯벌에 관한 내용인데, 갯벌의 면적은 거의 30년 만에 60%로 감소했다. 이는 연안 간척 때문인데, 이것은 곧 연안 지역에 산란지 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어족 자원이 성장하고 생장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YSLME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 UNDP의 지휘를 받는 GEF, 즉 지구환경기금에서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경계를 넘어선 협력 메커니즘이며 전 세계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이다. YSLME 프로젝트는 91년도에서 시작해 05년에 1단계가 시작되었으며, 07년에 전략이 만들어졌다. 또한 14년에 1단계를 완수했고 15년에 2단계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신호는 나타나진 않고 있다. 어선 감축 효과에도 불과하고 자원량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어떻게 번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생태계 서비스가 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장이항 선생님이 YSLME의 2단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개념에 기초하여 진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앞으로 황해에 적용하자. 그 중에서도 나는 장이항 선생님과 같이 보호를 확대하고 각 지역 정부간 보호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황해를 청정한 구간으로 만들려고 했었다. 5년동안 사업을 진행했으나 2단계가 잘 진행 되지 않았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황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결해보자. 국제적으로는 MSP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간 가능한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자원을 보존, 이용한다면 훨씬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 지방 정부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지방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틀일 것이다.

허재영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일 것이며, 보호구역의 확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상 오염물질을 제어하고 MPA도 북서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장차 북한까지 포함하여 서해안과 북서태평양지역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해양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쟝이항 남정호 박사께서 YSLME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겠다. 이 그림을 보면 해양 생물의 양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주요 8종의 생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어종이 변화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참조기라는 어종이다. 참조기는 크기가 큰 어종으로 보통 23-24년을 사는데 중국 주변의 바다에서 실제로 잡히는 참조기는 모두 1, 2년 생이다. 이는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해파리인데, 크기 3미터의 대형 해파리이다. 중국의 연안 지역에 어획되는 해파리의 86% 이상이 이런 종류이며 한국은 20% 이상이다. 과거에는 적조가 해양의 재난과 같은 일이었으나 요즘에는 해파리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질산염, 규산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규산염의 감소란 해안에서 악몽과 같은 것인데, 해파리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규산염의 감소가 있다. 산소의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 저산소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양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양 생태의 오염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회의는 해양 생태의 보존에 관한 것인데,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는 어획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바다 양식 자원의 수급이 불균형해지고 해양에서 양식을 할 경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다에서 진행되는 양식은 매우 더러운데, 새우와 조개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해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삼이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양식되는 환경을 확인하게 된다면 아마 이를 먹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획량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통해 공급하는 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중 양국은 300만톤의 양식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바다 양식의 60%가 오염물로 바다에 배출되고 있다. 저희는 한 시범 지구에서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78세이신 미국인과 함께 진행을 했다. 이분은 광역 생태계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신 분이었다. 이때 실험은 산동성의 상고 만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지역은 양식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남정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황해에 있어서 11개의 관리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30척의 어선을 감축하고 매년 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IMTA 프로젝트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참가국들은 여기에 비준을 했다. 북한 출신의 관료도 참가를 하여 생태 보존 사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허재영 말씀 감사하다. 그 동안 황해에서 쭉 연구를 해오시고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황해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 대신 IMTA 생태 통합 양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주셨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인 시모노세키 대학의 하마다 선생님을 소개한다.

하마다 에이지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일본 수산의 상업화 브랜드, 지역 브랜드의 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보고 내용을 수산물 브랜드화로 한 이유는, 수자원에 대한 어획 압력을 완화시키려면 고부가가치화, 양식의 브랜드화, 환경을 배려한 양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보고는 두 가지인데, 1. 일본의 어업의 브랜드화의 현상과 문제. 2 앞으로의 수산물 브랜드이다. 한중일의 공통적인 과제의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전에 브랜드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할 것인데, 그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먼저,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그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품을 표준 상품, 특수 상품과 브랜드 상품으로 구분하는데, 보통의 상품들은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사 달라고 한다. 이는 표준 상품에 해당한다. 브랜드 상품이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팔아달라고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표준 상품이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선택 받은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되는 것이다.

수산물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천연 자원인데, 천연 자원의 브랜드 가치는 희소성이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야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또는 특정한 시기에만 소량으로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양식 수산물이 있다. 양식 수산물의 경우에는 우수한 마케팅 기술이 필수적이다. 타사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기술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모노세키 복어와 같이 브랜드 가치 자체가 유통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유통업자의 신뢰성, 문화적인 특징 등으로 가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시모노세키 복어가 팔리는 츠키지 시장을 조사해 보면 이 지역의 복어가 다른 복어에 비해 20%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츠키지 시장에 대한 중개인들의 평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이곳의 복어를 다른 산지에 비해 품질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상품이 매우 깨끗하다. 품질이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한 것, 즉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설명드린 시모노세키 복어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홍보활동이다. 매 시장은 1월 5일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데 시모노세키 복어는 하루 이른 1월 4일에 첫 경매를 시작하고 왕실에 납품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두 번째는 중개인들인데, 이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중요하다. 경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상품 브랜드화가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정기관의 협조이다. 시모노세키 지역의 모든 맨홀에는 복어가 그려져 있다. 네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탐구이다. 시모노세키 복어를 파는 레스토랑들은 각각 사시미의 두께가 다른데, 이 두께에 따라 사시미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두께의 사시미가 가장 맛있는지 각 식당이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 브랜드를 통해 “사회에 무엇을 약속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다.

다음으로, 앞으로 수산물의 브랜드화는 천연 자원보다는 양식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수산물 브랜드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것이 있다. 어류의 다이옥신 오염은 여러 바다, 일본 바다, 황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양식 자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렇게 다이옥신을 제거한 상품도 맛은 똑같았다. 앞으로 이러한 제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이 99%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생산비 역시 850엔에서 650엔으로 크게 감소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의 완전 양식이다. 알에서부터 사시미까지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품질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후처리나 전기그물 이용 등의 다른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각자 자국에 맞는 독특한 양식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매우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허재영 충남도의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자연물을 브랜드화하는 것이었다. 일본도 비슷하겠으나, 이 경우 유통과 생산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유통 및 생산 구조 사이에 브랜드를 가져다 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후에 이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는 오운열 정책관의 토론이 이어지겠다.

오운열 세 분의 말씀을 매우 잘 들었다. 저는 이 토론의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말하겠다. 우리나라의 건축에서 아파트 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도시 전체라는 맥락에서 설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수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해양 생태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산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면, 지난 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5kg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는 63kg, 일본은 55kg였다. 한국 국민이 1년에 소고기를 10.48kg, 돼지고기를 22kg 닭고기를 10kg을 소비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9.9kg였다. 수산물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중요한 식품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 325만톤 중 95만톤이 배를 통해 생산이 되며 양식이 138만톤을 차지한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나라 양식 특성은 해조류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며, 138만톤 중 135만톤 정도 된다.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면 공급량 역시 증가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공급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어선 어업 2 가두리 등의 양식 3. 가까운 곳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 환경의 악화, 남획, 어치 남획 등으로 어족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가 어렵겠다는 인식이 많다.

이는 해양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선어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바다 숲 조경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만 2천 헥타르의 바다 숲을 조성했다. 일본 이노우에 교스케 씨의 〈어촌 자본주의〉에는 어촌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자체 주민과 공무원들이 협력해 어촌을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남정호 박사님과 이 부분을 공유해서 현재 충남도의 천수만을 개발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이 뿐만 아니라 바다 숲 조성, 고기 잡는 시간 제한 등의 방향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해산물을 포획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측 발제자 분의 발표에서는 양식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은 거의 먹을 수가 없는 정도이다. 우리 역시 생사료가 가라앉아 해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생제 과다 사용의 문제도 크게 감소했다. 제가 아무래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중일 관계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아까 중국 측 발제자는 생태통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1. 양식장 용수 2. 사료 3. 종자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생물 기술 등을 이용해 수질을 정화하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 즉 아주 병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료에 있어서도 매우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투입하여 물고기의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것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한중일 사이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수입한다. 중국에서는 작년 83만톤을 수입했다. 사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낮을 수는 있지만 중국 내 우리 식약처 같은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와 서로 점검을 시행하여 매우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생의 표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토콜이 갖추어져 있다.

허재영 수산업은 해양생태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전체 말씀을 요약한 것 같다. 이 맥락에서 세 분의 토론과 발표를 정리해보면, 우리 황해는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수한 자원은 우수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양식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브랜드화가 아닐까 한다. 우리가 생산하거나 어획한 물건들을 아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수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하마다 선생님께는 어촌에서 브랜드화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쟝 선생님께는 IMTA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여쭙고자 한다.

하마다 에이지: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기술과 마케팅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득을 하고 품질 차이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양식 자원의 경우에 브랜드화를 높일 수 있는 점은 마케팅 능력이다. 다른 점은 크게 차이가 없다. 천연 자원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어업은 석유를 채취하거나 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은 산업으로. 바다 속에 있는 것을 잡는 기술이다. 어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탐색 기술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낸다. 이는 공업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장이항 IMTA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세 가지 국제적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단품 양식이다. 예를 들어 조개류와 미역 등 또한 IMTA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채택했는데, 매년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다양한 어족에서 경제적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정호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황해는 한 바다이기 때문에, 국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각자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서로 나누게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한다.

허재영 수산업의 터전은 바다이다. 밭이 건강해야 좋은 농작물을 획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다가 건강해야 좋은 수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의 공동관리, 그리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키워드였다.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린다.

본세션 공생2

2017년 11월 2일(목)

16:40-18:10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환황해 지역은 산업화로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환경과 건강피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의 경우 중금속과 이온성분 등의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 체내 깊숙이 침투하여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지역에 집중 건설되어 있는 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대기오염시설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세션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고,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상호 협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사회자 |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발표자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왕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조교수)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토론자 |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환경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자료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내에서 이미 징진지 지역의 대기 오염 저감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더욱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한·중·일의 데이터 공유와 총괄적인 표준 제정이 필요함.
- 일본은 자동차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통해 도쿄 대기질 향상에 성공한 바 있음. 따라서, 지역에 따라 적절한 대기환경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박재묵


명형남


왕리


미노우라 히로아키


장임석

박재묵 세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지정 토론자이신 장임석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참석하신 일반 참가자분들께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

명형남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건강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중·일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았고, 충남의 대기 오염 현황과 건강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충남과 한국이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이다.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안전하지 않은 식수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명은 오염된 공기질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13억명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살고있다고 분석되었다. OECD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별 미세먼지 연평균 노출 농도 데이터를

엑셀로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참고하면, 한국의 경우 1998년 29.3 ㎍/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에 32.0 ㎍/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중국은 한국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노출 농도인 13.7 0 ㎍/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2.3배, 중국은 3.6배, 일본은 평균 노출 농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의 경우 일본에서는 2000년에 인구 10만명당 102.5명에서 2012년에는 88.7명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은 약하게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WHO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성이 이슈화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옴에 따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인 3등급에 해당하며, 일본은 2등급, 중국은 6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고 조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한국 15,000명, 일본 11,000명, 중국 950,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지표이자 환경보건과 생태계 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성과지수의 한국 종합 순위는 2014년 180개국 중 43위였다. 2016년에 들어 80위권을 차지하였는데 이렇게 순위가 떨어진 데에는 166위에서 173위로 떨어진 대기질 지수와 29위에서 103위로 떨어진 건강 지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대기질 지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80개국 가운데 173위, 일본은 104위, 중국은 179위를 차지하였다. 대기질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에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에서 이슈화되면서 30년 이상의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기로 하였다. 전국에 있는 8개의 대상 시설 중 4개의 시설이 충남에 있다. 6월 한 달 동안 가동 중단 후 충남을 중심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에 비해 15.4%가 감소하였으며, 모델링 결과로는 월평균 3.3%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대기 오염 현황을 검토해보았는데, 전국 발전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환경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5위를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차지하였다. 충남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연소 부문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충남 미세먼지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도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 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당진시, 천안시 등 서북부 지역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가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은 2001년부터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기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이자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이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비염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과 충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충남이 7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충남도 내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발병률이 보령시에서 가장 높았고,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당진시와 천안시에서 높았으며,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의 유병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의 환경성 질환 증가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과성이 아닌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 물질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천식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 물질로 미세먼지(PM10)가 유병자 수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천식의 경우 미세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2.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총부유분진과 미세먼지(PM10)였는데, 총부유분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유병자수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세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3.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올해부터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한하여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하고, 영향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대상 지역인 보령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권역과 저탄장의 영향권역, 서천화력 1호기· 2호기 굴뚝영향권역과 저탄장의 영향권역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표본자 수는 인구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 할당 표집으로 해당면 인구의 약 10%를 추출하였고 표본 크기는 727명이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 20세 이상의 남녀이고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평소 많은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신체 증상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가동 중단 기간 동안 그 증상에 대해 개선의 경험이 있는지 그 수준을 물어봤고, 평소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과 가동 중단 기간 동안 그 질환의 호전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답변을 분석해보면 석탄화력굴뚝 영향권역에서는 통계적으로 평소 신체 증상을 경험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이 1년 혹은 2년 되는 주민들에게서는 증상의 발생 정도가 높다가 3년 이상부터는 감소하고 20년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서 증상의 발생이 증가한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거주 기간 1~2년 사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만성적으로 적응이 되고,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성 증상과 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한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신체 증상의 개선 경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목따가움, 두통, 피부 가려움과 같이 모든 질환에서 4~7%정도 각 증상의 호전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의사로부터 대기 오염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기관지염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게 나왔고, 특히 B-1 지역(주산면)의 기관지염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질환의 호전을 경험한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다른 질환에 비해 기관지염의 호전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고 특히 보령화력 굴뚝의 영향권역 주민들의 경우는 기관지염의 호전 경험이 80%에 이르러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안된 조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기에 앞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 발전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발전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대기질 규제로 인해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전해오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건강 피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충남은 건강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1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세먼지 배출원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배출시설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제도 부문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배출기준을 강화하며,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역제안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2017년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민감계층보호 분야, 정책기반 분야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충남이 촘촘하게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봄철 일시 가동 중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을 포함한 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전에 진행되는 성격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 정책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주민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연구는 증상의 개선과 질환의 호전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설문조사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아가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건강영향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중국에게도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왕리 징진지는 중국의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을 어우르는 이름으로, 자연적인 특징은 서북 산지, 동남 평원, 동부 해역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화베이 평원에 위치해 있는 징진지 지역은 북쪽으로 네이멍구 고원, 서쪽으로 황투 고원, 동쪽으로 보하이에 인접해 있다. 또한 서쪽에 타이항산 산지, 북쪽에 옌산 산지가 있고, 옌산 이북은 장베이 고원, 그 나머지는 하이허 평원으로, 총면적은 21.6만㎢이다. 인접한 성은 북쪽으로 랴오닝, 네이멍구자치구, 서쪽으로 산시, 남쪽으로 허난, 산둥, 동쪽으로 보하이가 있다. 징진지 지역은 중위도 지대에 위치해 있어 뚜렷한 온대, 반습윤 계절풍 기후를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의 자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옌산, 타이항산, 네이멍구고원의 영향으로 징진지 지역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서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산지, 고원, 구릉, 평원, 분지, 호수, 해양 등 다양한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징진지의 일부 지역은 산택의 형태를 가졌는데, 이것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012년 말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높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하여 많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도 관련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환경보호부 '전국 도시 공기질 일간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의 기준보다 훨씬 높음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노력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대기 오염의 악화가 다소 억제되었지만, 도시건설이 가속화되고 물질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를 이루는 새로운 오염원이 징진지 대기 오염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매연,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 발생으로



복합적인 대기 오염이 새롭게 야기됐다. 이 중 PM2.5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PM2.5는 대기 중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인체 건강, 공기질, 가시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PM2.5는 공기에 바로 배출되는 1차 입자와 오염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입자로 구성된다. 이 중 1차 입자는 먼지 입자 및 식물과 광물 연소로 생성되는 카본블랙 입자를 포함하는데, 주로 자동차, 석탄, 바이오 연소에서 기인한다. 2차 입자는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을 포함하며, 대기 중의 1차 오염물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이 균일 혹은 비균일한 산화로 산성 에어로졸을 형성하는데, 이는 대기 중의 유일한 알칼리성 기체 NH3와 반응해 생성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용제 도료 등 휘발, 공업물질 등에서 발생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미세먼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베이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명한 효과가 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107이었던 수치가 현재 70정도로 감소했다. 목표치와는 멀지만 우리의 저감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연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징진지 지역의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징으로 생태환경 악화가 심화됐다. 지형적으로 볼 때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으며 북부와 서부의 옌산과 타이항산이 평지 대부분의 절반을 둘러싸고 있다. 북부 네이멍구고원, 서부 황투고원이 황사 발원지인데, 주로 편북풍과 편서풍이 불어 황사의 습격을 자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베이 방호림 등 일련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황사의 영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지만 이 밖에 미세먼지 문제도 두드러진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미세먼지의 출처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량의 휘발성 유기물, 질소산화물 및 주변 공업지대에서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유황이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입자이다. 징진지 이남 지역의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데, 편남풍을 타고 들어온 오염물이 산에 막혀 확산되지 못해 남아 있다가 원래 이 지역의 오염물과 2차 반응을 해서 대기 오염이 가중된다.

징진지 지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지역은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또 오염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메가시티와 영세도시와의 물류·인적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2013년에 이러한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경제발전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들이 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 발전은 각각 탈공업화, 공업화 후기 단계로 진입했지만 징진지 지역의 86.89%를 차지하는 허베이성은 공업화 중기 단계에 있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징이 단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공업화 중기는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단계이며, 대기는 지역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체적인 허베이성의 철강생산량이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중국의 석탄 에너지 이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70% 가까이 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징진지 지역의 자체적인 지리적 환경 또한 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철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원재료에 힘입은 허베이의 철강공업 발전이 규모 확장에는 유리하지만 석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오염물 배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자연 지리적 구도 측면에서 징진지의 북부는 옌산 산지와 장베이고원, 서부는 타이항산 산지, 나머지는 하이허평원이 자리 잡은 서북은 높고 동남은 낮은 '삼태기 형상'을 나타낸다. 오염물이 산 앞 베이징에 도달 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상 조건 측면에서 이 지역에 편남풍이 불면 이 바람이 허베이에서 배출한 대량의 오염물을 북쪽으로 보내는데, 옌산과 타이항산이 막고 있어 베이징에 정체되고 2차 반응으로 오염은 한층 가중된다. 이 밖에도 민간용 석탄,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 조리에 의한 유연 등도 미세먼지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지리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의 원인 유발점을 찾아보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은 국가·도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베이징 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지역의 대기 오염 방지 조례가 마련되었고, 지역별로도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와 연간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별 대기 오염 저감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또 실행되고 있다. 이 세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협력 사업 또한 생성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양자 간 또는 3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사태 대응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통합 정책들이 오염 유발원 별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 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2013년 전국 최초로 가솔린 차량 제5단계 배출 기준을 시행하였고 옐로우라벨 정책을 통해 노후화된 자동차를 대량 퇴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정책 또한 펼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선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눈에 띄는 효과를 얻었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미노우라 히로아키: 자동차 배기가스를 개선했을 때 도쿄의 대기가 좋아진 일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표하고자 한다. 일본이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에서 도로변 및 도시 변두리 지역을 살펴본 결과, 현재 15 μg/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총 778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그 중 195개가 환경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서쪽이 그러한 현상을 보인데 반해 다른 570 지역은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도로변에서는 원소탄소(EC)가 제일 높았고, 배경지역에서는 황산염 농도가 높았다. 연평균 15 μg/, 일평균 35 μg/미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연평균뿐만 아니라 일평균 기준을 달성하는 지역도 늘고 있어 현재 기준 달성 지역 비율이 74.5%에 달한다. 환경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황사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사의 영향이 높았을 경우에 기준치 달성률이 좋지 않다는 결과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의 환경은 좋지 않았다. 석유 제재도 있었고 매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계속 발생해왔으며, 한때 차량의 배기가스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아이들이 천식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킨 역사가 있다. 이에 일본은 관련된 법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고정 배출 분야이고 둘째는 교통 분야이다. 고정 배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1962년에 흡연을 규제하는 흡연 규제법(더스트 규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1996년에 채택되었다. 교통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질소산화물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규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원소탄소 농도 감소표를 살펴보면, 일본이 다른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기준에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은 엄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3년에서 2004년에 새롭게 규제를 했고, 2005년에 다시 배출기준을 줄였다. 현재는 서구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배기가스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규제를 이해했는지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겠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나갈 때 일부가 다시 회수되어 기계 안으로 들어가며 이것을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한다. 이 EG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매연 감소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DPF)를 사용한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입자들이 다 배출되었지만 SCR촉매를 이용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럭을 운행할 때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차량의 40~50%를 디젤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의 디젤 승용차 비율은 매우 낮다. 일본에는 디젤 차량이 거의 없고 대형 차량의 경우도 디젤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쿄 황궁 가까운 곳에 있는 도요타의 구단 빌딩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하였다. 미세먼지 안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원소탄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규제가 점점 변화하면서 원소탄소가 감소하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황산화물이 500ppm 정도 되는 높은 연료를 사용하다가 황산화물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소탄소뿐만 아니라 유기탄소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 황산염의 비율은 비교적 증가하고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염도 있지만 사실상 절반 정도는 화산에서 배출되는 황산염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본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탈석탄이라든지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2000년에 일정한 소각시설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반드시 정확한 지침에 따라 소각하도록 소각법이 바뀌었다. 이러한 소각법으로 인해 원소탄소와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으며, 2005년에는 원소탄소 연감소량이 0.88μg/가 되었다.

도쿄 중심에 매일 만 대 정도의 트럭이 지나다니는 매우 복잡한 구간이 있는데 이 부근에서 원소탄소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른 도시 배경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의 원소탄소 감소율이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소탄소의 경우 그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쿄 시내에서 확인 가능한 미세먼지에 가까운 PM2.1 조대입자를 보면 계절 변화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2주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은 물질들은 측정이 어렵다. 측정 실패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된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여름에 태풍이 있는데 이 또한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며 바이오매스 연소 때문에 대기 중 유기탄소와 칼륨의 농도가 높아진다.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의 함유량을 이용해 계산하는 pMC와 레보글루코산은 바이오매스원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열분해 유기탄소 (OC)와 관련이 있다. 식물을 태우지 않아도 여러가지 유기탄소가 이 레보글루코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한다. 또한 탄소14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이 물질은 반감기가 빠르기 때문에 식물을 태우면 그 식물이 흡수한 탄소14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 결과 pMC가 0%면 화석연료원이고 100%면 바이오매스원이다. 열분해 유기탄소는 조금 더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따로 지표를 만들어 살펴보았다시피 일본에서는 이렇게 바이오매스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 근처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측정을 해보니 30%정도가 바이오매스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무가 많은 요요기 공원에서 측정을 해보면 구단 빌딩

에서 측정한 것보다 10% 가량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중심가는 바이오매스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 곳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0%나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아마도 쿠킹 스모크, 담배 매연, 종이를 태웠을 때 나오는 매연과 같은 식물 기원 유기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도쿄의 고속도로 교차로인 가미우마 교차로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공기가 좋지 않은데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했는데 도로변에서는 높게 나오고 100m만 안으로 들어가면 원소탄소나 황산염이 줄어든다. 바람의 조건을 2배 이상으로 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크게 삭감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황산염의 경우는 여러가지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비람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도 농도의 변함이 크게 없다. 신기했던 것은 유기탄소인데, 도로에서는 높게 측정되지만 거리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서부에 위치한 지역의 3/4은 일본 기준치인 연평균 15 μg/를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환경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소탄소의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것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황산염과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되는 탄소들이 새로운 감축 대상이 되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다시피 일본의 차량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세먼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Q&A |

장임석 최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오염 방지 기술적인 측면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 WHO 잠정기준 2단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잠정목표 3단계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3년 만에 배출량을 두 배 정도 삭감해야 되는데 과연 전통적인 오염 방지 기술이 국민들의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너지나 자동차 문제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발전되고 있는 전기차 이후로 언제 또 다시 발전이 될지, 그리고 국가별로 장기적인 모듈이 있는지 궁금하다. 제조업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에 대한 규제,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한 제도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강력한 환경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다.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며 정책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측정 데이터 공유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주요 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박재묵 토론자께서 국가별 장기적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셨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장기적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다.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존인데, 오존은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 중에 있다.

왕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며, 단기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법률과 조례 또한 마련되고 있으며, 대기·토지·수자원과 관련한 거시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 징진지 지역의 통합적인 계획과 연간 계획 또한 세워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환경오염 저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러 시, 도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고 강화된 정책이 더욱더 마련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는 꼭 필요하며 총괄적인 표준 제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한·중·일이 함께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오염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한계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을 마련할 때 지금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1 히로아키 박사님께서는 일본에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의 디젤 차량 비율은 처음부터 낮았다. 1990년대에 일본에 디젤 차량이 처음 보급되었는데 매연 때문에 차량이 지저분해 진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

박재묵 한국에서는 일본의 디젤 차량을 수입한다. 이제 유럽에서는 디젤 차량 판매수가 휘발유 차량 판매 수를 능가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2 화력 발전소와 같은 대기 오염 소스를 찾을 수 있는 국내의 시스템이 언제쯤 마련될 것인지?

장임석 국내의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국제 협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나와있는 3세대 주축 모델에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에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Q3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석탄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둘 중 어떤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알고 싶다.

왕리 베이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고, 번호판 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가솔린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가 사용하는 전력을 보면, 석탄 이용 비율이 크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재묵 덧붙이자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중국이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명형남 박사께서는 충남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주셨다. 충남에 있는 노후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신선하다. 앞으로는 실제 데이터 자료 연구와 축적이 필요하다.

왕리 교수께서는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행해지는지 말씀하셨다. 대기 오염 대책에 대해서 충남 주민들이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저감 기술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보다는 기술 연구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히로아키 교수께서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의 연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도시의 경우에는 교통 혁명을 가져와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산 때문에 일본 대기 중의 황산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저감 기술을 채용해야 그 결과로 오염이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북아의 경우에는 한·중·일이 끊임없이 제도를 만들고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에 방문하여 얻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 대기 오염의 34%는 영국 아파트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국에서 생성된 오염물질의 70%는 대륙으로 간다. 따라서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과 영국이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M10의 경우,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70%가 다른 지역에서 왔으며 NO2의 경우는 21%만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한·중·일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특별세션 2

2017년 11월 3일(금)

09:30-10:50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지구적 수준에서 청년들의 삶의 토대가 불안정해지고 (insecure) 불확실해지는 (uncertain) 상황에서 세대간 비판이나 불만을 넘어서서 청년집단 스스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수준에서 주체의 혁신, 공동체의 혁신을 지향하는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환황해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동아시아 청년네트워크 세미나는 예술영역에서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활성화를 이룩하려는 여러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같이 만나 지역사회 예술운동이 처한 어려움과 가능성을 토론하고, 공유와 연대의 토대를 닦는 조그만 초석을 놓고자 한다.

사회자 | 강명구 (서울대 교수)

발표자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 NPO 법인 DxP 이사장)

토론자 | 김종구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임재일 (국립공주대 미술교육과 객원교수)
조미수 (풀울림 공동대표, 전 Peace Boat 공동대표)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는 수평성 소통, 자율적 협동, 자주적 자립, 전업 활동가, 일상생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창작 등 다섯가지가 있음.
- 소통 및 대화를 통해 청년들을 사회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년 정책 등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음.


강명구


임승관


팡레이


노리아키 이마이


김종구


임재일


조미수

임승관 15년동안 인천에서 문화바람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 왔다. 여기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던 경험으로 생활예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생활예술은 아마추어 동아리가 하는 모든 행위이자 순수예술과 전문예술가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지금 사회가 개인의 부담, 사회적 배제, 고립감, 고독감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며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자발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만 규제와 통제의 한계가 있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교육 혹은 컨설팅 등으로 자발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성장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역량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룰 때 성장이 가능하다.

주민들을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수평성 소통, 자율적 협동, 자주적 자립, 전업 활동가, 일상생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창작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요소는 수평적 소통이다. 생활예술을 접하게 되는 첫번째 동기는 기능을 습득해서 즐기겠다는 욕망이다. 같은 뜻을 갖고 모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며 신뢰가 쌓이는데, 이는 서로 익숙한 관계를 맺는

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 혹은 외부 사회에서 느끼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부터 견디게 되는 힘으로 작용한다. 높은 신뢰 관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손쉽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이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진다. 사회에서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서열화되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만 생활예술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위계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예술은 경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을 쉽게 드러내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존재감 및 자존감을 높이며 치유할 수 있다.

두번째 요소는 자율적 협동이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 자기가 받아들여지거나 자기가 속하고 싶은 곳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소속한다. 공동체의 규율에 따르고, 합의하며 책임도 져야한다. 여기서 자아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중요하며 동일성은 위험하다. 배타적 집단주의가 되면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나 갈등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또한 주인의식이 필요한데 이는 참여나 개입,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세번째는 자주적인 자립이다. 자립을 통해 정부 지원 의존을 낮추고 수평적인 민관협업을 이룰 수 있다. 자생력의 가장 큰 부담은 공동체의 거점 마련이다. 이에는 젠트리피케이션도 포함된다.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커뮤니티가 필요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받고, 그 건물을 계약한 사회적 금융 기관이 같은 액수로 건물 담보를 대출 받아, 그 돈은 시 정부에 다시 반환하여 이를 통해 자발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업 활동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전업 활동가는 사업의 목적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사람을 생각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고, 예술적 감수성뿐 아니라, 행정 업무 능력, 구성원내 관계 능력을 해결하는 능력, 조급해 하지 않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예술적 취향, 사회적 관계, 조직 내부 및 조직 외부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매개자로써 전문자적 역할을 요구한다.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예술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 경험과 현안 해결을 통해 얻은 지식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공동체 구성원과 권한 및 책임을 나누며 성장해야 한다. 활동가 역시 구성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창작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창작은 무엇이 절실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지역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다. 창작의 내용은 평범한 주민들이 일하는 것이 일상 소재가 되는 가장 매력적인 과정이다. 창작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생활 예술은 순수예술가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생활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며 순수 예술의 호명한 새로운 이름이다.

팡레이 젊은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2009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이 유입되었고 많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예술은 다시 쓰여지고 있는 단계이다. 중국 예술 교육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1977년 중국은 대입 시험을 재도입하고, 예술 교육 시스템을 재확립하였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모집되었고, 대학생들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이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하였다. 2004년부터 예술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 전국의 2000여개 대학에 700개 예술 관련 학과가 설립되었다. 또한, 2017년 10만명의 졸업생이 예술학교에서 졸업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있다.

원명원 화가촌은 중국 북경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마을이자 예술 지구이다. 원명원은 1990년대에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이 만든 마을이고, 송장미술관은 1994년 시작되었다. 예술 지구는 예술계에서 졸업하고 온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예술 지역 및 예술구는 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닌 개인 및 민간의 힘으로 형성되는 곳으로 안정성은 없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술 지구가 철거되었거나 옮겨 지기도 하였고, 집 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예술 트렌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은 북경에서 활동하며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며 재기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예술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예술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순수한 이론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예술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부한 매력을 지닌다. 예술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고, 생활 예술은 우리 삶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이마이 노리아키: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과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 하겠다. 연간 천명 정도 빈곤한 가정의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밥을 못 먹거나, 방에만 갇혀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 혹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원하는 고등학생을 보면 통신고등학교, 야간학교, 중퇴 혹은 등교 거부를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이다. 기부금을 갖고 1억엔 정도 활동하며 지원하고 있다.

18만명 정도의 통신고등학교 및 야간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40%는 등교 거부를 했었고, 70%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식사, 취업, 아르바이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교와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일을 시작한 이유는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힌 후 대인기피증,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며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등교 거부를 하는 이유에는 왕따, 빈곤, 부모님 및 선생님과의 갈등 등이 있고, 좌절하여 통신고등학교에 온 경우가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연결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해서 일하고 있다.

또한 한달동안 매주 같은 학생을 만난다. 선생님 한 명이 학생 세 명 맡으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사회인 스포츠와 시합도 하고, 실제로 카페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주고, 식당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취업 연결도 해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해외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어, 부산에도 8명 정도 보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낸다. 대만, 중국으로도 보낼 생각이다.

실적을 보면, 취업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일본에서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젊은이들 지원에 정부가 돈을 못쓰기에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한국은 청년 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일본보다도 많은 부담이 있는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시아에서 젊은 층이 서로 공부해서, 모든 세대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김종구 인간을 보통 인간, 기계적 인간, 예술형 인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위 세 분은 예술형 인간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나라에는 국영수라는 말이 있다. 좋은 스펙 및 좋은 직장이 있어야 잘 살고,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초 조소를 1학년 교양 과목으로 넣어야 된다. 교양 과목 중 그 두상을 만들기 위해 20여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들 중 숨겨져 있는 것들이 되살아 난다. 이에 대학 교육부터 국영수가 아닌 정치 및 경제 예술로 나누어야 한다. 미술을 다 같이 공유했을 때 인간이 같이 할 수 있다.

임재일 지역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도시 재생사업에는 많은 것이 있다.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저희 대학에서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중에 있어 160 곳 정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문화를 활용한 지역 역사를 보는 곳이 많다. 이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표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현장에서는 내용을 정해 놓아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일본 갔을 때 유학생 친구들은 NGO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하는 활동이 아시아 권에서 같이 사회문화 활동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미수 재일동포로 도쿄에서 나고 자랐고, 피스보트라는 큰 배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12년간 활동하였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인간성의 회복과 인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에서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여러 공통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내편 너편의 갈등, 사회적 배제, 소통이 단절 등 여러 문제가 공통적이다. 한국에서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를까? 취업, 실업 문제, 주거지 문제, 집값 집세 문제가 있다. 경제적 가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까? 최근 일시적인 경제 호환에 따라 일본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걱정하는 부분이 줄었다.

이바쇼라는 개념은, 내가 있어도 되는 장소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다. 이바쇼를 찾는 활동, 한국에서도 이바쇼 찾기는 흔한 일인 것 같다. 한사람의 가치를 해주는 것은 경제적 안정성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감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활동을 통해, 어울리고 교환하며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인정하고 국가를 넘어서서 지역과 지역이 만나서 큰 사회적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

특별세션 3

2017년 11월 3일(금)

11:10-12:30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토론자 |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정일지 (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교수)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한중일 삼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분야에서 협력연구, 공동연구, 비교연구가 이뤄져야 함.
- 삼국 싱크탱크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가 특히 중요하며, 상호방문, 상호체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높은 단계의 교류가 이뤄져야 함.
- 각 기관의 외사담당 실무자 간 회의를 활발히 추진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다음 회 환황해포럼 기획단계에 각국 싱크탱크들이 참여함으로써 직접 세션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강현수


정초시


펑젠창


왕싱궈


고우이용


다즈강


정일지

강현수 이번 특별세션 3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면서, '왜 굳이 삼국 각국의 싱크탱크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곤 했다. 앞으로 환황해포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는데, 그 협력의 축으로 민간기업, 주민, 공무원 그리고 싱크탱크가 있겠다. 공무원, 정치지도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입장을 띨 수 밖에 없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단기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앞선 주체들과 달리, 싱크탱크는 학문이 그 중심에 서기 때문에, 보편적, 객관적, 중장기적 이해관계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번 세션에 어느 지역의 대표자들을 모셔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적으론 충남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고려했으며, 이번에 모신 일본, 중국, 충북의 기관들은 충남연구소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이다. 한중일 삼국은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공업지역'이라는 일종의 공통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상호 학습을 위한 삼국의 조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오늘 교류의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결국 '여기 모인 한중일 지역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일단 각 토론자마다 간단한 기관 소개와 더불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선호 사항을 먼저 얘기해 주셨음 한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이 속해있는 귀주성은 중국 서쪽에 위치한 지방정부 중 하나다. 귀주성 사회과학원은, 귀주성인민정부 직속 기관으로서, 산하에 1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연구지원분야는 총 2개가 있다. 전체 관리자 직원 수는 184명이며, 정급(正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27명, 부급(副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65명,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직원은 70명, 박사 학위 소지자는 40명이다.

매년 200~24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체계 및 이론을 연구하는 '기초이론 연구' 체계에는 양명(陽明)문화연구, 삼선건설(三線建設)연구, 귀주불교문화연구, 항전(抗戰)문화연구, 묘족무경(巫經)문화연구 등의 주제가 있다. 앞선 연구 과제는 민족연구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족법학, 산업경제학, 지역경제발전경제학, 응용사회학 등의 과제가 연구 중에 있으며, 요즘에는 특히 빅데이터관리학에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성과로는, 중공중앙선전부 '마르크스주의 이론연구와 건설 공정' 주요 실천 경험 종합 과제 2건을 진행하여 선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는 정책결정 응용 연구로, 귀주성 각급 정부의 규획과 주요 문건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본원의 전문가가 [국무원(2012)2호] 문건, 첸중(黔中)경제구역발전규획 등 국가, 성(省)의 주요 문건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강(珠江)과 서강(西江)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도 주목해줬음 한다. 이런 성격의 연구는 우선 공무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참여하게 되며, 이후 성정부의 허가 하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행된다. 또한 국가개발위원회와 국무회에의 보고를 통해 중앙문건을 연구할 수 있는 등 지원 및 협력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 지도부 지시 과제의 연간 입안 수가 2010년의 14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과제들은 모두 성정부차원의 감독 하에서 진행되며, 현재 모두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 사회과학원은 '과학연구•인재양성•관리강화'라는 3대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강현수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총 27개의 광역정부가 지역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공동 연구원을 운영하는 정부도 있어 총 14개의 지역연구원이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에선 철학, 막시즘을 포함한 순수 경제이론 연구, 역사 문화 연구 등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스펙트럼이 한층 포괄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즈강 사회과학원 소개에 앞서, 삼국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항상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곤 했으며,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곤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환황해 포럼 개최는 충남연구원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흑룡강 사회과학원은 6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헤이룽장분원 철학사회과학학부와 1964년 설립된 헤이룽장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79년 성정부의 승인을 거쳐 비로소 현재의 흑룡강 사회과학원이 설립됐다. 사회과학원 산하에는 13곳의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수는 총 300여명으로, 그 중 박사급 연구원은 33명, 석사급 연구원은 80여명이다.

본 사회과학원은 석사 학위 수여 권한을 보유한 5개 지방 사회과학원 중 하나로써, '인류의 사회과학원'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연구, 인구개발분야를 포함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연구 진행 시에는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정세와 안목에 맞춰 합리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연구 성과물의 개수가 대략 300개에 달할 정도로,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하면서도 심도 깊게 이뤄지고 있어 동북아지역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사회과학원에서는 국제문제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제문제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기 모인 한중일 삼국과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한 상황이며, 한국과도 관계가 긴밀해 충남연구원과 충북연구원 모두 현재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강현수 다음 발표자께서 오신 일본 구마모토현은 충남과 오랫동안 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교류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한국의 지역연구원에 대응하는 연구원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세션을 위해선 지역대학을 파트너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일지 구마모토현은 부산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한 곳이다. 또한 강현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 내 인구가 180만명 정도로 약 210만명이 상주하고 있는 충남과 비슷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규모도 비슷하다. 작년 4월 구마모토 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당시에도 충남의 아낌없는 지원이 큰 도움이 된 적 있다.

일본 지자체 내 싱크탱크 현황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일을 컨설턴트나 싱크탱크에게 위탁하는 일은 별로 없다. 2012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싱크탱크의 수는 총 46개이며, 모두 현, 선 단위가 아닌 '시'단위에서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다소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구마모토현 내 설치된 싱크탱크 중 협의의 싱크탱크로는 2012년 도시정책연구소에서 새로 설치한 신생 싱크탱크가 유일하게 있다. 다른 지자체 소속 싱크탱크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공무원들이 겸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계약직 연구원이 3명밖에 없다. 신생 기관인 만큼 아직 정책 제언은 하지 못하며, 기초 데이터 구축이 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130년 전 메이지 시대 때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데이터 구축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고 때 대비 및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데이터 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싱크탱크와 관련해서는, 구마모토현립대학 내 지역연계연구추진센터가 2013년에 개편하면서 새로 설립한 싱크탱크가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연계 조사와 대학생 현장체험 및 지역 공헌 성격의 활동이 있다. 지진발생지역에서 향토계승요리를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짓기 등이 그러한 활동의 예인데, 이처럼 학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대학 내 싱크탱크의 역할이다. 또한 국제교류 방면에 있어서도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과의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005년에는 국립대와 같이 규모가 크고 종합적인 대학 내에서 '정책창조연구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곳의 설립목적 또한 지역 공헌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진피해지역 등의 지역에 거점을 설치한다는 점이다. 국제교류활동으로는 한중일 연구답사 활동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외에도 산간지역 폐교를 활용한 거점 설치, 지역소식 뉴스화, 학생 대상 정책제안 컴페티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에서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싱크탱크 간 국제교류 사업안을 제시해보자면, 평화라는 지향점으로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며,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코스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이 속해 있는 허베이성은 최근 들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다른 성 정부보다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징진지 프로젝트, 장강삼각주 경제권, 일대일로를 포함한 여러 국가전략이 발표되면서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 4월 당국이 바오딩시를 슝안신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경의 수도 기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결과적으로 허베이성의 경제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허베이성에 위치한 본 사회과학원은 종합연구기관으로, 산동성, 흑룡강 사회과학원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연구소, 농촌경제연구소, 재무경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인력자원연구소, 법학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신문방송학연구소,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연구센터, 관광연구센터를 비롯하여 산하에 12개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특색 있는 연구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원내에는 총 300명의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분야에서는 2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 싱크탱크로는 거시경제와 공공정책연구센터, 도농발전연구센터, 혁신드라이브발전연구센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의 약칭]협력발전연구센터, 사회관리연구센터 등 총 5곳이 있으며, 신세대 연구기관, 싱크탱크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방성을 추진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대외교류를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원내에 외사판공실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일본 이와테 대학 및 도호쿠 대학, 미국 인디애나대학 및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러시아 과학원 및 경제예측연구소 등이 있다. 현재 대외교류를 위한 성정부의 지원이 있으며, 본 기관은 연구 성과를 성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제안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왕싱궈 산둥성은 충남과 근접하며, 경기도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경기개발원과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산둥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경기개발원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의 싱크탱크 운영모델에 대해 많이 배운 적이 있기도 하다.

본 사회과학원이 위치한 산둥성은 중국 모든 성 중 경제 총량 기준으로 3위에 위치하며, 2016년 기준 GDP가 1만 달러 이상이었다. 이 수치를 설명하는 요인 중에는 가장 먼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외한보유량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많은 인구를 꼽을 수 있다. 호적인구는 9800만명, 상주인구는 1억 이상이며,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둥성은 도시발전을 추진하면서 서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는 결을 달리 하여 산둥성만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차별점은 산둥성 출신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본 사회과학원은 1978년에 개원했으며, 개원 40주년을 맞게 되는 내년에는 다양한 기념 활동이 준비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다른 기관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문화, 역사, 철학, 경제, 농촌, 금융, 사회발전 등이 있으며 기관 산하에 총 16곳의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중 최고로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해양경제 부문이다. 해당 분야의 연구를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연구진행을 위해 칭다오와 진안에 분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강세 분야로는 유학연구가 있어 한국, 일본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과의 경우, 양국 지도자 간 체결이 있어 이미 3차례의 학술교류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학으로, 이 연구는 관련 기금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높은 평가가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기관에는 200명의 전문 기술인이 있으며, 박사급 연구원은 90여명, 석사급은 140여명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눠지며, 정부에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성과 중에는, 본 사회과학원의 끊임없는 제언을 통해 시주석의 육상 및 해상을 통한 발전 전략이 수립된 사례가 있다.

대외교류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31개 국가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간 본원은 글로벌 정상급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세계 유명 대학 싱크탱크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LKYSPP) 아시아경쟁력 연구소와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본원 전문가, 학자의 학술적 시야를 넓혔고 국제 학계에서도 본원의 지명도를 높였다.

한국과의 교류상황으로는, 경기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동대학을 포함하여 여러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유학교류대회', '한중해양경제포럼' 등 한중 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포럼을 수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성 정부의 대외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본 사회과학원의 역할 및 과제로서는, 성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싱크탱크로서 대외교류을 위한 당면과제를 발굴해내며 중요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은 항상 충남연구원을 벤치마킹하려 노력하지만,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본 연구원에는 현재 박사급 24명, 순수 연구원 34명이 속해있으며, 특별조직 및 위탁사업을 포함하면 총 80여명에 달한다. 본 원의 설립목적은 충청북도청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언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청의 흐름에 맞춰 경제성장이 최우선과제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작년 중국 산시성과 흑룡강성 등을 방문해보니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학문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접근 방법의 차이로, 경제는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단단히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이 기초학문 측면에서 대단한 내공을 쌓고 있음을 깨달은 후, 최근에는 충북연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선 경제 자체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을 옮겨가고 있다.

충북연구원이 당면한 과제를 2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충북은 바다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대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생각이 다소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 지향적인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의 역사, 문화, 철학,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실제로 현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정치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경제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다시 말해, 문화적 가치로 어떻게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원 본 기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경우, 산시성 과학원과 MOU를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기관들과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다. 일본과의 경우엔,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야마다시 현 내 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사례가 유일하다. 본 포럼은 농촌문제, 인구문제, 고령화, 인구절벽 등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각국의 관점을 서로 공유하는 동시에, 농촌관광, 제조업 정책과 같이 현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시도 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중국 다른 기관들과의 교류확대를 꾀한다면, 실질적인 학문교류, 연구자 간 교류, 정책의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은 23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으로, 50여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145명의 직원이 종사 중이다. 연구분야로는 도시개발, 경제산업, 문화관광, 행정복지, 해양수산 등이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여성과 역사문화 분야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농촌개발, 수자원관리 등에 있어서는 특별센터를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연구의 패러다임이 개발, 성장, 발전이었음에 따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지곤 했으나, 최근 들어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구의 큰 틀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분야 중 하나인 해양수산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중일 삼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은 농촌, 환경, 도시개발 등으로 비슷하다. 앞서 말한 듯이, 삼국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교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의 교류는 지양해야 하며, 각 지역의 주민과 연구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하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실무자 간 합의 하에 대화의 자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Q&A |

Q1 환황해포럼을 3년째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이 포럼이 매우 유익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부터 포럼에 참가하면서 황해를 통해 역내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공동의 발전과 평화, 안녕을 꿈꿀 수 있는 주제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노인, 농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공동의 문제를 풀어간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남은 이 포럼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싶지만, 강원장이 지적했듯이 공무원만이 이끌고 가기엔 벅찬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역내 연구원이 교류를 통해 직접 과제를 설정하고, 지역정부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하는데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Q2 정일지 교수가 얘기해준 일본 내 싱크탱크 현황에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아직 지방자치

단체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큰 규모의 싱크탱크가 없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학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립적인 싱크탱크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민간위탁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선 레포트를 효과적으로 빨리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장기간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레포트 작성이 가능한지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도도부현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지역밀착형 데이터 수집 기관이 있다. 현 시대 속에서 이런 기관들이 더욱 주목 받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

Q3 싱크탱크 운영관리에 있어 인재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인재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강현수 인재유출문제에 대해선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방지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두진 않았다. 삼국 싱크탱크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 환황해포럼부터는 충남연구원을 포함한 삼국 싱크탱크들의 외사전담 부서들이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직접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세션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 둘째, 이론연구성과 교류뿐만 아니라 현장방문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연구원들이 직접 타 기관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자분들께서도 삼국 싱크탱크 간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정초시 IMF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한중일 GDP 차지 비중이 23.3% 였으며, 2050년이 되면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경제규모는 끊임없이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삼국의 청년들이 이 기회를 십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출신국가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황해포럼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미래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펑젠창 앞으로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 공동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즉, 같은 과제를 가지고 공동연구 및 비교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논의가 가능한 분야로는, 환경문제, 신농촌건설, 도농 간 양극화 해소, 신도시건설 등이 있을 것이며, 특히 신도시건설에

있어 중국의 슝안신구, 한국의 세종시 등 서로 비교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호사례도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호연구과정교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가 한국, 일본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왕싱귀 삼국 싱크탱크 간 협력 방안 제시에 앞서, 본 사회과학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민간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원의 공공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삼국 싱크탱크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펑 원장의 말에 십분 동의한다. 공동 관심사 발굴과 인력 간의 상호방문이 핵심이며, 인력교류 방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직접 연구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사회과학원의 경우에도, 공정혁신 발표 후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분들을 최대한 초빙하는 것을 중요 기제로 설정한 바 있다. 언론, 포럼 등을 환영함으로써 교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우이용 강 원장이 앞서 제시한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귀주성 사회과학원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포럼으로 생태문명포럼과 빈곤퇴치포럼을 꼽을 수 있는데, 후자에 충남연구원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충남과의 협력에 있어 이러한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귀주성은 사실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귀주성 주민들이 선진적이라고 느끼는 한국의 음식, 애니메이션, 미용 등의 분야에서 교류하고 싶다. 또한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가 귀주성이 앞으로 추진할 신농촌건설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쪽에서도 교류를 희망한다.

다즈강 한중일 싱크탱크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선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교류를 다양하게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층을 포함한 민간교류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강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중일 간에 인재 공유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본 사회과학원은 동북아시아 내 50여개의 싱크탱크가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 연맹을 17년 간 이끌고 있다. 연맹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그 협력의 끈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관계가 긴장 상태일수록 이번 환황해포럼와 같은 포럼을 통해 연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자체에 소속된 싱크탱크의 역할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과의 연대도 필히 필요하다.

정일지 이번 세션에 참가하면서 일본이 삼국 중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가는 기분이다. 방금 다즈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탱크의 '독립성'에 관해 덧붙이자면, 싱크탱크 유형을 구분할 때, '독립성-내부'를 한 축으로, 또 '실무-연구'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만든 표가 있다. 일본 싱크탱크의 경우엔 눈에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또 독립적이기 보다는 지자체의 선호 방향에 맞춰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중국의 싱크탱크들과의 협력에 앞서, 일본 내 여러 기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른 두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강현수 한중일 삼국 싱크탱크 간의 교류 및 협력은 각 지역의 공무원 간 협력, 주민 간협력,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협력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제안이 이뤄졌다. 먼저, 공통관심사를 재확인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연구, 공동연구, 비교연구, 그리고 인적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나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강조한 바 있다. 상호방문뿐만 아니라 상호체류도 언급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포럼, 언론과의 워크샵 등 다양한 형식이 제안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무자 모임, 온라인 모임을 진행시켜, 단기적으로는 내년 제 4회 환황해포럼에서 기관 대표자들께서 직접 충남에 방문하셔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같이 연구주제까지도 선정하는 등 세션 구성에 있어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 충남에 방문, 체류하고 싶은 연구원이 있으시다면 장소를 제공할 의향도 있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발 행 처 충청남도

발 행 일 2017년 12월

디자인·인쇄 쵸이스디자인 (02-2275-2633, 044-868-2634)



제3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